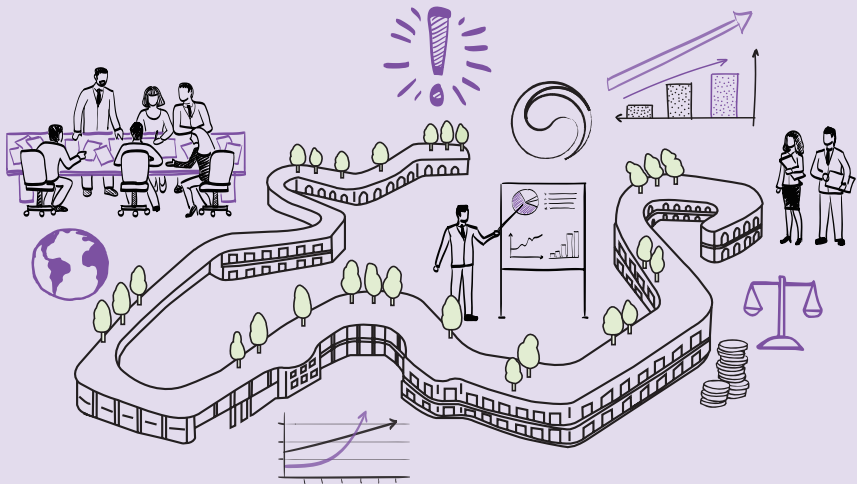


알기 쉬운 국가회계

2023




발간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겪은 이후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 위기가 우려됨에 따라 각 나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재정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재정정책으로 인한 영향을 판단하고 장기적이고 중대한 의사 결정을 올바르게 내리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발생주의 회계 및 재무보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 중요한 때입니다.

「알기 쉬운 국가회계」는 국가회계와 재무보고 시스템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되기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알기 쉬운 국가회계」는 ‘발생주의’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국가회계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재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자산 및 부채, 재정운영에 관한 최신 재무정보와 발생주의 도입 이후 10년여에 걸친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모쪼록 국가회계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좋은 안내서가 되기를 바라며, 끝으로 이 책의 발간을 위해 오랜 시간 수고를 아끼지 않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 구성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3년 8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재진



Contents

Government Accounting

Part 01

Part 02

Part 03

제 1 장

발생주의 회계제도
기초다지기 08

제 2 장

국가 회계제도
이해하기 28

제 3 장

국가 재무제표
들어다보기 46



Part 04

Part 05

별첨

제 4 장

주요 계정과목
살펴보기

68

제 5 장

국가 재무제표
'더' 들여다보기

102

2022회계연도
국가 재무제표

130

국가회계실체 현황
(2022년 9월말 현재)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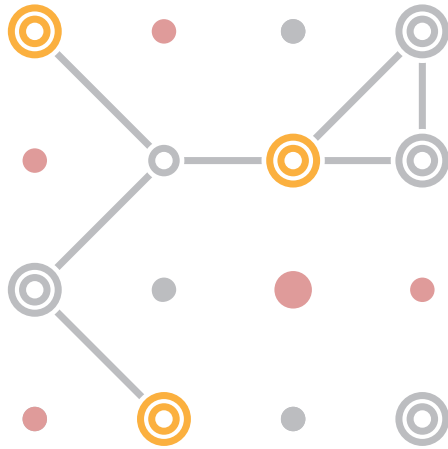
알기 쉬운 국가회계

Government Accounting



Part 01

발생주의 회계제도 기초다지기





01 발생주의 회계제도 기초다지기

1. 발생주의란 무엇인가요?

- 발생주의란 경제적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거래를 기록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금을 수취하거나 지급한 시점에 거래를 기록하는 방식인 현금주의와 상대되는 기록 방식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가정에서 외상(카드결제)으로 물건을 구매하였을 때 발생주의 방식의 회계처리는 외상(카드결제) 구매 시 거래를 기록하지만, 현금주의 방식의 회계처리는 외상(카드결제)을 현금으로 갚을 때 거래를 기록하게 됩니다.
- 이러한 이유로 현금주의는 한 회계기간 내에 일어난 경제활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가정보다 더 큰 규모의 기업이나 정부의 경우 더 많은 차이와 오류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기업이나 정부에서 현금주의 재무정보만을 산출하는 경우 아무리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하더라도 현금의 흐름이 발생하지 않으면 수입 또는 지출로 계상하지 않게 되어 자칫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 발생주의 방식은 현금주의 회계기록의 한계를 보완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의 산출이 가능합니다. 기업과 정부는 이러한 정보를 활용할 경우 적절한 성과 평가 및 미래 예측이 가능해지므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발생주의는 현금의 이동에 관계없이 향후 자산·부채의 변동이 있을 것이 확실할 때 거래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림 1-1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발생주의 기록시점]



[현금주의 기록시점]

2. 복식부기란 무엇인가요?

- 복식부기란 거래 발생 시 동시에 기록을 두 번(차변과 대변) 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원리 원칙에 의하지 않고 재산의 증감만을 기록하며 손익의 기록을 하지 않는 방식인 단식부기와 상대되는 개념입니다.
- 예를 들어, 현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였을 때 복식부기 방식의 회계처리는 현금을 지급한 사실과 그 결과 자산(자동차)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동시에 기록하게 되지만, 단식부기는 현금 지출만을 기록하게 됩니다.
- 따라서 복식부기는 자산을 명칭별로 분류하고 기록하므로 자산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으나, 단식부기의 경우에는 자산대장을 별도로 비치하지 않는 한 현금 출납 기록을 일일이 파악하여 자산 현황을 다시 산출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래를 원인과 결과로 나누어 양쪽으로 기록합니다. 사례에서처럼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현금을 지출했다는 기록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그림 1-2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단식부기 기록방식]

[복식부기 기록방식]



3. 우리나라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경과를 알고 싶어요

- 발생주의·복식부기 정부회계 도입에 대한 논의는 19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민간부문인 기업의 경영투명성과 회계투명성 문제가 주된 원인이었던 외환금융위기는 경제사회 각 부문과 공공부문에 있어서 투명성의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만든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 경제위기 극복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제공한 IMF와 세계은행은 우리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제적으로 정합성을 가진 회계기준을 민간전문기구가 제정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이러한 투명성에 대한 요구는 공공부문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IMF의 권고사항에는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및 정부회계제도의 개선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1998년 초에 김대중 대통령의 정권 인수위원회는 100대 국정 과제의 하나로 발생주의·복식부기 정부회계 도입을 포함시켰습니다.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998년 5월 정부는 발생주의·복식부기 정부회계의 도입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 이후 재정경제부 국고국에서 2003년까지 모든 정부회계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확대 도입하겠다는 '정부회계제도 개편방향'이 마련되어 진행되었지만, 행정부 내부에서 제도의 정비 및 관련 시스템의 구축 등에 예상 외의 시간이 소요되어 2003년 도입 목표는 달성되지 못하였습니다.
- 하지만, 2003년에 다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발생주의·복식부기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을 주요 개혁과제의 하나로 삼아 추진하게 되었고,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감사원 등 범(凡)정부적 노력을 통해 국가회계법의 제정(2007년), 국가회계기준의 마련(2009년)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구축(2007년) 등의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한국의 중앙정부는 2009년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전면 도입하였으며, 국가재정법 부칙에 따라 2년간(2009~2010회계연도)의 시범적용 기간을 거친 후 2011회계연도 중앙관서 및 국가 재무제표를 2012년 5월에 최초로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2014년에는 기존 회계준칙과 회계처리지침을 통·폐합하고 서술방법을 문단식으로 정비하는 등 국가회계규정의 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
그림 1-3 발생주의 도입 경과

1998	· 1998년 재정경제부 국고국에서 2003년까지 모든 정부회계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확대 도입하겠다는 '정부회계제도 개편방향' 마련
2003	· 2003년에 다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발생주의·복식부기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을 주요 개혁과제의 하나로 삼아 추진
2007	· 국가회계법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구축
2009	· 2009년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정부회계제도를 전면 도입
2010	· 국가회계기준센터 설립(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2011	· 회계 직류 공무원 신설
2012	· 국가 재무제표 최초 국회 제출 · 공인회계사 시험 '정부회계' 반영
2014	· 국가회계제도 체계 정비(국가회계편람 발간)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03~2006년 시범운영을 통해 2007년부터 부기 회계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재무제표에 공인회계사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지방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표 1-1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발생주의 회계 도입 현황

구 분	현 황
국 가 (중앙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재정법(2006.10.) 및 시행령(2006.12.) 제정 · 국가회계법 제정(2007.10.), 시행(2009.1.) · 2009년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 2년간 시범운영(2009~2010) · 2011회계연도 국가 재무제표 국회 제출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년간 시범운영(2003~2006) · 지방재정법(2005.8.) 및 시행령(2005.12.) 제정 · 2007년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전면 시행 · 재무제표에 공인회계사 검토의견 첨부하여 지방의회 제출 · 지방회계법 제정(2016.5.), 시행(2016.11.)
공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FRS 도입(공기업은 2011년, 준정부기관은 2013년 도입) · 재무제표에 공인회계사 감사의견 첨부하여 기획재정부 제출 ·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2017.12.), 시행(2018.1.)



4. 우리나라 발생주의 도입 효과는 무엇인가요?

(1)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의 강화

- 종전의 세입세출 결산의 경우 계약에 의한 국가채무만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국가 채무의 예는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인데 모두 계약에 따라 향후 재정 지출이 확정된 채무입니다. 이러한 채무를 관심 있게 관리하여야 하는 이유는 채무 상환 일정에 맞추어 재정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가가 지급불능 상태가 될 수 있고, 이는 국가 신인도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이런 채무만을 관리하다 보면 지출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국가가 지급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부채(회계용어로는 총당부채)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잠재부채의 대표적인 예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연금총당부채가 있는데 종전 방식에서는 산출되지 않고 있어 재정지출 규모 결정 시 총당부채가 고려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 반면,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연금총당부채 등 향후 재정지출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계상하게 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미래 재정부담능력을 예측하여, 중장기 재정전망에 따라 재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결과 2015년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촉발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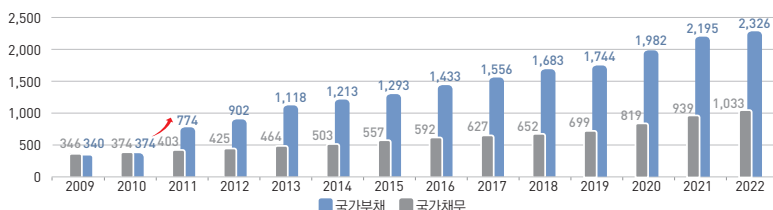


지출규모나 시기는 확실하지 않지만 향후 지출 가능성이 높은 총당부채를 인식하여 이를 기초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림 1-4 발생주의 도입효과 -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에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 재무제표상 부채와 국가채무 비교 (단위 : 조원)



*자료출처: 2009~2022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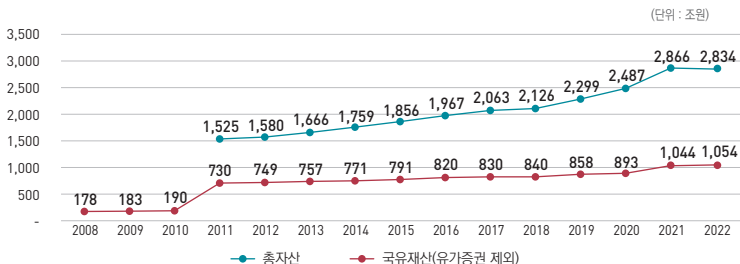
(2) 국가자산 관리 체계의 강화

- 종전의 국가자산 관리 체계에서는 사회기반시설과 건설중인자산을 대부분 내부적으로만 관리하고 결산에서는 제외하여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하였습니다.
- 하지만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른 자산 관리 체계에서는 국가가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결산에 포함하여 관리합니다. 공사가 완료되기 전인 건설중인 자산도 투입된 자원의 가치만큼 자산으로 기록하여 관리가 강화되며, 도로·하천·댐·공항·항만·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도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관리됩니다.
- 재무제표에 기록된 자산들은 감가상각 등을 통하여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주기적으로 자산의 내용연수, 잔존가치, 현재 자산의 상태 등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과거에는 건설비 지출 연도에만 건설비 지출액이 세입세출결산서에 보고가 되었지만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이후에는 건설 이후에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가 계상되며, 도난 및 파괴 등으로 자산에 물리적 손상이 발생하면 재무제표에 해당 손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결산에 포함하여 관리하므로 자산을 누락 없이 기록하고,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림 1-5 발생주의 도입효과 - 국가의 숨어 있는 자산을 찾아내어 모든 국가자산을 관리체계에 포함시켰습니다.



*자료출처: 2008-2022년 국가결산보고서 및 국유재산관리운영총보고서



(3) 국가재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 관리

- 종전의 세입세출 결산의 경우 개별법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및 제출로 전체 국가 자산·부채 규모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 예를 들어, “국가자산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관리하고 있는 자산 유형별(국유재산, 물품, 채권)로 금액을 파악하여야 했습니다. 이마저도 복식부기 방식처럼 거래 발생 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별도의 장부로 기록하게 되어 있어 그 금액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신하기 어려웠습니다.
- 하지만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면서 재정상태표에서 자산·부채 종류별로 금액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국가자산·부채 규모 등 국가재정의 전체모습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별 보고서에서 관리하던 국가 자산·부채 내역 및 금액을 한눈에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림 1-6 발생주의 도입효과 - 나라살림을 한눈에 파악하여 의사결정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 자산·부채의 종합적 관리



[재무제표 도입 전]



재정상태표(2022년)	
자산	부채
2,834 조원	2,326 조원
	순자산
	508 조원

[재무제표 도입 후]

*자료출처: 2022년 국가결산보고서

- 또한 종전의 세입세출 결산의 경우 순수한 재정사업원가를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에는 자산취득이나 부채상환으로 인한 현금지출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재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재정지출이 늘어난 것인지 혹은 자산을 구매하여 재정지출이 늘어난 것인지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 하지만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으로 재정운영표를 작성하게 되면서 정확한 사업원가 정보와 수익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국가재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발생주의 도입으로 국가의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현황을 한눈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림 1-7 연도별 총자산·총부채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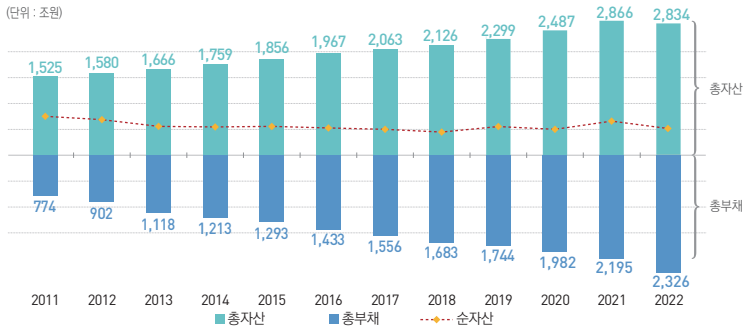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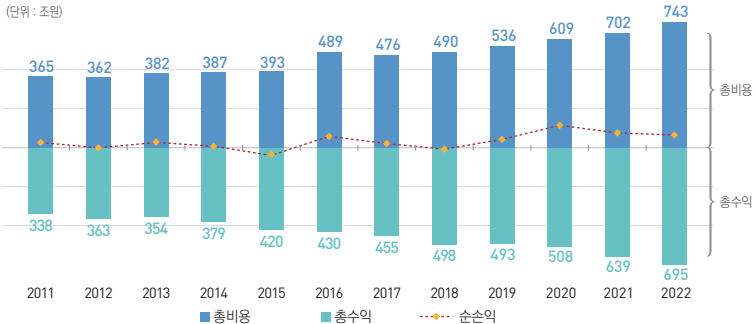


그림 1-8 연도별 총비용·총수익 규모





(4) 국가재정 사업의 효율성 제고

- 종전의 예산제도에서는 국가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 되었는지 여부와 이 정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에게 책임을 지우는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 하지만 2007년 국가재정법을 제정하면서 종전의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프로그램 예산 제도로 전환되었고, 예산체계에도 성과관리 개념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국가는 성과가 높은 사업으로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여 국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22회계연도 기준 61개의 중앙부처에 대해 16대 분야, 75개 부문, 627개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원가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원가관리 분야에도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이 도입됨으로써 국가가 운영하는 수백 개의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원가의 통제 및 관리가 가능해졌고,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으로 국가재정 사업에 관한 원가 산출됨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 운영과 성과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표 1-2 발생주의 도입효과 - 국가사업의 성과평가 및 원가관리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프로그램순원가 및 재정운영순원가 변화

(단위 : 조원)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I. 프로그램총원가	335	342	341	385	416	440	491	561	609	693
II. 프로그램수익	(69)	(79)	(102)	(83)	(87)	(95)	(103)	(108)	(128)	(145)
III. 프로그램순원가(I+II)	266	263	239	302	329	345	388	453	481	548
IV. 비배분비용·수익	(12)	(21)	(16)	37	(9)	(28)	(20)	(34)	(37)	(66)
V. 관리운영비	21	23	24	24	25	26	27	29	32	31
VI. 재정운영순원가(III+IV+V)	275	265	247	363	345	343	395	448	476	513

*자료출처: 2013~2022년 국가결산보고서

(5) 국제 비교가능성 제고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국은 우리나라보다 일찍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채택 이전에는 해외 주요국과의 재정상태를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표 1-3 주요국의 발생주의 회계 도입 시기

국 가	뉴질랜드	호 주	미 국	영 국	캐나다	한 국
도입연도	1993	1994	1998	2002	2003	2009

* 자료출처: 국가회계제도 개혁 백서(2012)

- 나라별로 적용하는 회계기준이 상이하여 회계처리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으로 산출된 수치의 비교를 통하여 국가재정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2021 회계연도 기준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한국, 뉴질랜드 순으로 높게 나타나며,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보다 부채가 많음을 의미합니다.
- 또한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에 따른 회계정보가 생산됨에 따라 최신 국제기준(GFSM 2001 및 PSDS 등)에 따른 재정통계의 산출이 가능해지면서 비교가능성 및 대외 신뢰도가 제고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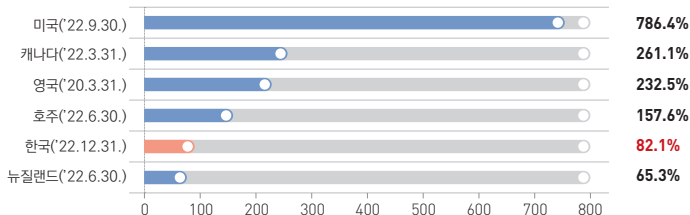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면서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한 국가 재정건전성 평가가 가능해졌고, 그 결과 대외 신인도 제고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림 1-9 발생주의 도입효과 -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국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 비교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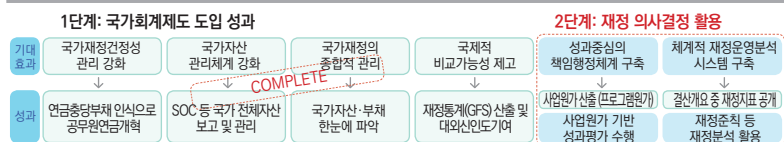




5. 우리나라의 발생주의 도입으로 인한 향후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으로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재정 의사결정 등에 활용되어 성과중심 책임행정체계 및 재정운영분석 시스템 구축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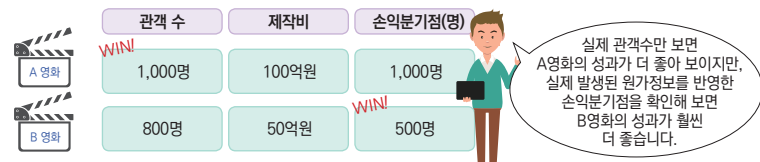
그림 1-10 국가회계 발생주의 제도 도입 기대효과와 성과



(1) 발생주의 정보를 활용한 성과중심의 책임행정체계 구축

- 국가는 정책적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재정정책 효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두어 성과평가를 수행합니다.
- 국가의 정책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를 할 때 단순히 교육생 수, 박물관 방문자 수 등의 결과만 고려하는 경우 진정한 '성과중심의 책임행정체계 구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천만 관객 영화라 해도 제작비에 따라 영화의 수익성이 매우 다르므로, 단순히 관객 수만으로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 방문자 수, 용자이용률, 만족도 등과 같은 사업결과에 발생주의 정보인 사업원가정보, 용자보조비용이나 수익정보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 사업의 효율성, 효과성, 편익 분석이 가능하여 성과중심의 책임행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림 1-11 향후 기대효과 - 국가의 정책 사업에 대한 성과를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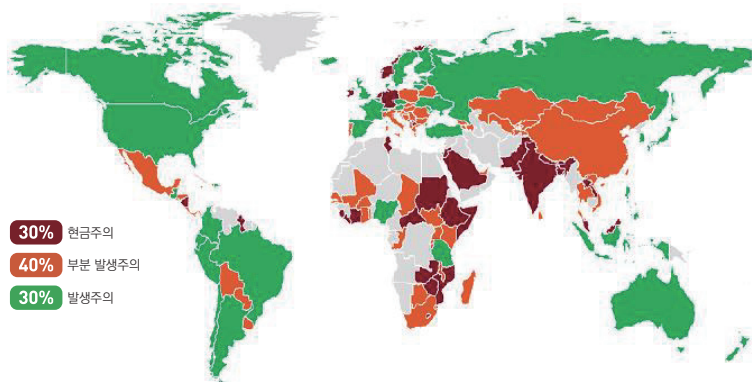


6.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국가 현황을 알고 싶어요

- 1990년대 이후 재정적자 누적 및 경제성장 둔화 문제를 겪고 있던 선진국들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편으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뉴질랜드와 영국은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주도적으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이었습니다.
- 효율적 재정운영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찾는 과정에서 이익 창출을 위한 자산의 효율적 사용을 추구하는 기업의 회계방식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 것입니다.
- 2022년 기준 OECD 국가 중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 국가는 이미 발생주의·복식 부기 회계제도를 채택(표 1-4, 29개국)하였으며, 2025년까지 전 세계 50%에 해당 하는 83개국에서 발생주의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처럼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는 국가의 재정건전성과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판단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되어 주요 국가에서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림 1-13 2020년 재무보고 기준



*자료출처: IFAC/CIPFA IFAC-CIPFA-International-Public-Sector-Accountability-Index, 2021

표 1-4 OECD 회원국 38개국 중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국가 현황

회계제도	국가명	정부회계기준	도입연도	
발생주의 도입국가	1	한국	자국기준	2009
	2	미국	자국기준	1998
	3	프랑스	자국기준	2007
	4	캐나다	자국기준	2003
	5	폴란드	자국기준	2001
	6	덴마크	자국기준	1990's
	7	핀란드	자국기준	1990's
	8	헝가리	자국기준	2013
	9	영국	IFRS ¹	2002
	10	호주	IFRS	1994
	11	스페인	IPSAS ²	2010
	12	터키	IPSAS	2006
	13	스위스	IPSAS	2006
	14	벨기에	IPSAS	2003
	15	오스트리아	IPSAS	2013
	16	이스라엘	IPSAS	2004
	17	칠레	IPSAS	2006
	18	체코	IPSAS	1989
	19	뉴질랜드	IPSAS	1993
	20	슬로바키아	IPSAS	2008
	21	리투아니아	IPSAS	2010
	22	라트비아	IPSAS	2007
	23	에스토니아	IPSAS	2004
	24	아이슬란드	IPSAS	1998
	25	일본	IPSAS 부분도입	2000
	26	멕시코	IPSAS 부분도입	2014
	27	스웨덴	IPSAS 부분도입	1993
	28	콜롬비아	IPSAS 부분도입	1996
	29	코스타리카	IPSAS	-
도입추진	30	슬로베니아	자국기준	-
	31	그리스	IPSAS	-
	32	포르투갈	IPSAS 부분도입	-
미도입 (현금주의 또는 수정현금주의)	33	아일랜드	-	-
	34	독일	-	-
	35	이탈리아	-	-
	36	네덜란드	-	-
	37	노르웨이	-	-
	38	룩셈부르크	-	-

*자료출처: OECD(2016), Accruals Survey를 토대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¹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국제회계기준

² IPSAS(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



7.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이란 무엇인가요?

-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이하 'IPSAS')은 민간부문의 국제회계기준(IFRS)에 비견되는 공공부문의 국제 표준 회계기준입니다.
- IPSAS는 개념체계를 비롯, 38개의 발생주의 기준서, 1개의 현금주의 기준서, 3개의 권장실무지침(RPG)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PSAS는 민간부문의 국제회계 기준(IFRS)의 체계와 규정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부문의 특성을 추가 반영하는 방법으로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이하 'IPSASB')를 통해 제정됩니다.
- IPSASB는 공공부문 재무보고를 개선하고 공공재정관리(PFM)를 강화할 목적으로 1997년에 국제회계사연맹(IFAC) 산하 기구로 설립된 이래, 정부 등 공공부문을 위한 IPSAS를 제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IPSASB는 현재 17개국 총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2017년 9월 정도진 교수(중앙대, 前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가 한국 최초로 IPSASB 위원으로 선임되어 2020년까지 3년 임기로 활동 한 바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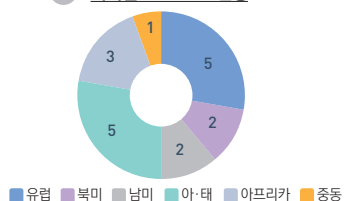


그림 1-14 IPSASB 위원 현황

유럽	4개국	영국(2), 프랑스, 스위스, 독일
북미	2개국	미국, 캐나다
남미	2개국	파나마, 브라질
아시아-태평양	5개국	뉴질랜드, 중국, 필리핀, 일본, 말레이시아
아프리카	3개국	남아공, 탄자니아, 케냐
중동	1개국	사우디아라비아

총 17개국 18명

지역별 Member 현황



- 한국은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IPSAS 및 타 국가 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국가회계기준을 개선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한 기준을 개발하고 IPSAS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8. 다른 나라들은 발생주의 도입으로 어떤 성과를 얻었나요?

- 해외에서도 여러 주요 국가들이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회계투명성과 회계책임성 확보, 공공재정에 대한 이해, 장기재정건전성 평가, 성과평가, 자산 및 부채관리 측면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다만, 발생주의 개혁은 장기간이 소요되며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들은 발생주의 회계정보의 활용에 대해 아직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국가들은 공공재정의 관리 및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선적 목표를 정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1) 회계투명성·회계책임성 확보 및 공공재정에 대한 이해 제고

- 해외 여러 국가에서 재무제표를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회계투명성과 회계책임성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발생주의 재무제표를 작성·공개함으로써 공공재정에 대한 ‘공정한 시각’을 제공하여 국회, 국민, 외국인 투자자, 국제적인 감독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포괄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발생주의 재무정보는 공공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발생주의 정보를 활용하여 공공재정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고 간결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시민을 위한 재무제표 안내서(A Citizen’s Guide to the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를 발간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4page’라는 재무 요약서를 브로셔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다수의 국가들도 재정정보를 한눈에 (At a glance) 파악할 수 있는 결산개요를 재무제표 내에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림 1-15 프랑스의 ‘4page’와 미국의 ‘재무제표 결과요약’



*자료출처: https://www.performance-publique.budget.gouv.fr/sites/performance_publique/files/files/documents/budget/comptes/2018/CGE2018_Plaquette_4_pages.pdf
<https://www.fiscal.treasury.gov/reports-statements/financial-report/results-in-brief.html>



(2) 장기재정건전성 평가

- 다수의 국가들은 장기재정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생주의 정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현금주의 재정목표와 함께 발생주의 재정목표인 '공공부문 순채무(PSND: Public Sector Net Debt)'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부문 순채무(PSND)는 공공부문의 총채무에서 유동자산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미국은 발생주의 재무제표와 사회보험보고서(SOSI)를 바탕으로 '재정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를 연간 재무보고서의 일부로 발표하여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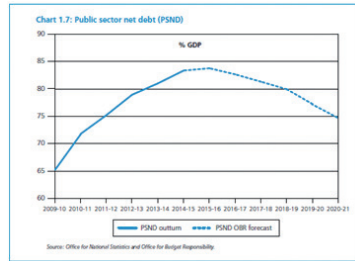
그림 1-16 영국의 '공공부문순채무' 재정지표 사례

Table 1.3. Comparison of key fiscal aggregates between Budget 2016 and Autumn Statement 2015

	Outturn			Forecast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Public sector net borrowing (£ billion)							
Budget 2016	91.9	72.2	55.5	38.8	21.4	-10.4	-11.0
Autumn Statement 2015 ¹	94.7	73.5	49.9	24.8	4.6	-10.1	-14.7
Change compared to Autumn Statement 2015	-2.8	-1.3	5.5	14.0	16.8	-0.3	3.7
Public sector net borrowing (% GDP)							
Budget 2016	5.0	3.8	2.9	1.9	1.0	-0.5	-0.5
Autumn Statement 2015 ¹	5.2	3.9	2.5	1.2	0.2	-0.5	-0.6
Change compared to Autumn Statement 2015	-0.2	-0.0	0.3	0.7	0.8	0.0	0.1
Public sector net debt (% GDP)²							
Budget 2016	83.3	83.7	82.6	81.3	79.9	77.2	74.7
Autumn Statement 2015 ¹	83.1	82.5	81.7	79.9	77.3	74.3	71.3
Change compared to Autumn Statement 2015	0.2	1.2	0.9	1.4	2.6	2.9	3.4

¹ Outturn figures for Autumn Statement are given as estimates at Autumn Statement.
² Debt at end March. GDP revised over March.

Source: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and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자료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OECD, 「해외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활용방안 연구·분석」, 2017.8. UK, 「Budget 2016」, 2016.3.

(3) 성과평가 시 원가정보 활용

- 사업의 성과평가, 재정 운영의 승인 및 통제에 발생주의 원가정보를 활용합니다. 성과평가에 발생주의 정보를 활용함에 따라 특정 활동에 대해 민간부문과 비교가 가능해졌습니다. 일본의 경우 성과평가에 발생주의 원가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처별로 선정된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원가정보를 산출한 '정책단위원가정보(Policy Unit Cost Information)'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원가회수 대상 정부 서비스의 적정 원가를 산정하도록 한 '요금 부과 체계 및 원가 회수 정책(Charging Framework and Cost Recovery Policy)'을 공식 지침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4) 공공자산 및 부채관리

- 무엇보다 가장 큰 효과는 자산과 부채의 관리에서 나타났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자산과 부채는 정부의 재정적 감시대상이 아니었으나,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실사가 이뤄지면서 관리적 측면의 많은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다수의 국가들에서 잉여자산의 파악, 채고관리 개선, 유지 및 해체 비용 정보 제공으로 사회기반 시설 의사결정 개선, 민간투자사업과 리스 관리 개선, 조세정책 개선, 연금개혁, 국부펀드 설립, 총당부채 정보를 통한 관리문제 인식 고취 등을 발생주의의 도입 성과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 최근 공공자산 관리(Managing Public Wealth)를 위하여 발생주의 대차대조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차대조표 정보가 기존의 채무나 재정적자 정보보다 재정현황을 더 광범위하게 보여줄 수 있어 재정 관리에 유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IMF에서는 전 세계 경제 규모의 61%를 차지하는 31개국의 대차대조표를 집계하여 공공부문 대차대조표(The Public Sector Balance Sheet)를 발표하였습니다. 공공부문 대차대조표를 분석한 결과 자산이 클수록, 건실한 대차대조표일수록 더 높은 수익과 더 낮은 자금조달 비용이 발생하며,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유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MF의 공공부문 대차대조표 분석 결과는 정부가 부채를 줄이고 양질의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정부가 대차대조표를 재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
그림 1-17 IMF의 'Managing Public Wealth'



*자료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OECD, 「해외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활용방안 연구·분석」, 2017.8.
IMF, 「World Economic and Financial Surveys Fiscal Monitor Managing Public Wealth」, 201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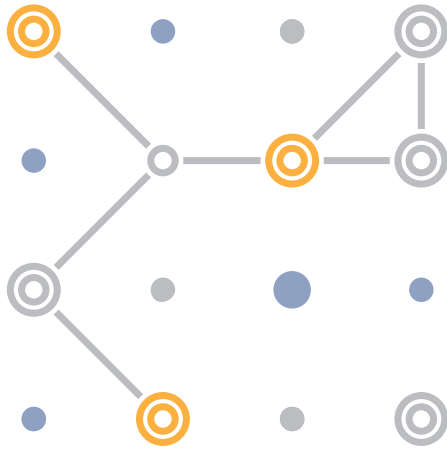
알기 쉬운 국가회계

Government Accounting



Part 02

국가 회계제도 이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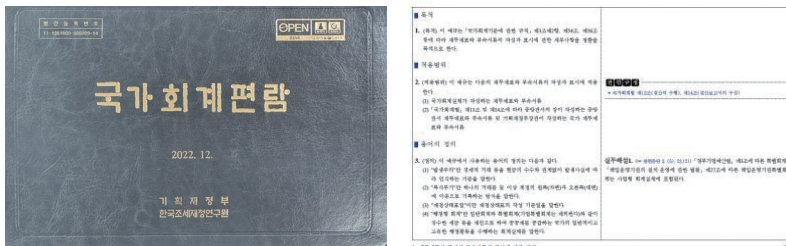
1. 국가회계기준이란 무엇인가요?

- 국가회계기준은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 필요한 기준으로서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해지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국가회계기준')을 말합니다.

2. 발생주의 국가회계법령의 체계를 알고 싶어요

- 발생주의 국가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법령체계는 국가회계법, 국가회계법 시행령, 기획재정부령인 국가회계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가회계법은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근거법이며, 국가회계기준은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 필요한 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회계기준에서는 일부 회계처리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2개의 국가회계예규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예규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무를 통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을 말합니다.
- 국가회계예규는 실무자들의 이해 가능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편람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국가회계편람의 경우 본문(예규규정)과 부록(문단제정근거, 실무해설, 적용사례 등을 포함)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림 2-1 국가회계편람



* 국가회계편람은 기획재정부 법령자료실 및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에서 파일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림 2-2 국가회계법령의 체계

국가회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산보고서 체계, 구성 등
↓	
국가회계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결산보고서의 작성과 부속서류 제출 등 세부적인 사항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제표(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주식) 작성방법 • 자산·부채 정의, 평가방법 등
↓	
국가회계예규(2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식으로 구성된 기준을 보완하여 실무적용에 필요한 사안에 대해 상세 해설과 회계처리 사례를 문단식으로 제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 2. 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 3.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4.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5.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6. 기타의 자산과 기타의 부채 회계처리지침 7. 리스 회계처리지침 8. 총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 9.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10.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11. 비용 회계처리지침 12. 연금 회계처리지침 13. 보험 회계처리지침 14. 보증 회계처리지침 15. 용자 회계처리지침 16. 민간투자사업(BTO·BTL) 회계처리지침 17. 국유재산위탁개발사업 회계처리지침 18.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19. 국고금 회계처리지침 20. 세입·세출외거래 회계처리지침 21.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 22. 정부조직개편 회계처리지침 <p>*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국가회계>국가회계법령>국가회계법 https://www.kipf.re.kr/gafsc/accounting_FinancialAccounting.do</p>



표 2-1 국가회계예규 주요 내용

국가회계예규	주요 내용
1.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	재무제표와 부속서류의 작성과 표시
2. 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	중앙관서 재무제표와 국가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사항
3.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 최초 인식, 인식 후 평가, 제거 등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4.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분류, 최초인식, 감가상각, 재평가 등
5.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무형자산의 분류, 최초 인식, 상각 등
6. 기타의 자산과 기타의 부채 회계처리지침	재고자산, 저장품, 선급금, 선급비용, 선수금, 선수수익, 퇴직급여 총당 부채 등의 회계처리
7. 리스 회계처리지침	리스의 분류기준 및 세부 회계처리
8. 총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	총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회계처리 및 추석공시
9.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교환수익의 분류 및 회계처리
10.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비교환수익의 분류 및 회계처리
11. 비용 회계처리지침	비용의 분류 및 회계처리
12. 연금 회계처리지침	연금총당부채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
13. 보험 회계처리지침	보험총당부채의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
14. 보증 회계처리지침	보증총당부채의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
15. 융자 회계처리지침	융자보조원가총당금 평가 및 회계처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
16. 민간투자사업(BTO-BTL) 회계처리지침	민간투자사업의 개념과 유형별 회계처리
17. 국유재산위탁개발사업 회계처리지침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개발 및 관리에 대한 회계처리와 공시 등
18.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원가계산에 대한 구체적 사항
19. 국고금 회계처리지침	국고금회계의 특성 및 회계처리
20. 세입·세출외거래 회계처리지침	세입·세출외거래 유형과 회계처리 등
21.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	회계정책 변경, 회계추정의 변경, 전기오류수정에 관한 세부사항
22. 정부조직개편 회계처리지침	정부조직 개편 시 자산, 부채 및 순자산 이관 등 회계처리와 결산에 관한 사항

3.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의 관계를 알고 싶어요

- 국가결산제도는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각각의 법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재정법은 국가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재정운용의 일반 원칙 및 예산편성·예산집행·성과관리·결산·국가채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산과 관련해서는 결산보고서 작성·제출절차 및 일정을 규정하고 성과보고서를 결산보고서에 통합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회계법은 국가재정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발생주의 회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으로서, 국가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재정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생산·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 기반의 회계제도를 도입하는 근거법으로 국가회계의 처리기준과 결산보고서의 구성 및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 2-2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의 결산관련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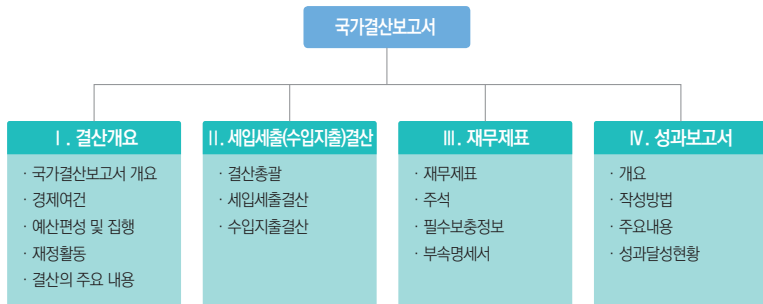
구분	내용
국가재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결산보고서의 작성·제출 절차 및 일정을 규정 중앙관서결산보고서 → 국가결산보고서 → 감사원검사 → 국회제출 (2월말) (4월 10일) (5월 20일) (5월 31일) * 국가재정법 '제3장 결산'에 명시
국가회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회계의 원칙, 회계책임관의 임명,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국가회계 제도 인프라 규정 • 국가회계기준(기획재정부령)의 근거 마련 • 결산보고서의 구성 및 작성(결산 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4. 결산보고서의 구성 및 주요 내용을 알고 싶어요

- 결산보고서는 결산 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구성됩니다.
- 결산 개요는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 및 기금의 집행 결과, 재정 운영 내용과 재무 상태에 대한 내용이 요약되어 작성됩니다. 특히, 재무결산과 관련해서는 국가 자산, 부채, 재정 운영결과를 요약한 표와 간략한 설명을 기재합니다.
- 세입세출결산은 국회에서 승인된 예산 대비 실제 집행 결과를 비교하여 작성하는 보고서로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이전부터 현금주의 방식으로 작성하여 왔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중요한 결산서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산제도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승인된 예산 대비 사용 실적을 비교하는 보고서는 반드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주석으로 구성되며, 국가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됩니다.
- 성과보고서는 각 부처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사업)에 대해 사전에 정한 성과목표 대비 달성한 실적을 비교하여 보고하는 서류이며,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과 더불어 시행되었습니다.

그림 2-3 결산보고서의 구성 및 작성 방법



5.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란 무엇인가요?

- 결산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속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회계법에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의 수입지출결산, 국가결산보고서의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별로 부속서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결산보고서 중 재무제표에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는 국가채무관리보고서, 국가채권 현재액보고서, 국유재산관리운영보고서, 물품관리운영보고서로 구성됩니다. 이 4가지 부속서류는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이전부터 작성하고 있는 현금주의 기반 보고서입니다.
- 현금주의 예산제도에서도 회계연도 말(12월 31일)까지 받지 못하는 채권 또는 지급하지 못하는 채무가 발생하게 되고, 승인된 예산을 지출하여 비품을 사고, 건물을 건설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현금주의 예산제도에서도 국가가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재산 또는 채무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관리하는 보고서가 국가채무관리보고서, 국가채권 현재액보고서, 국유재산관리운영보고서, 물품관리운영보고서인 것입니다.

표 2-3 결산보고서별 부속서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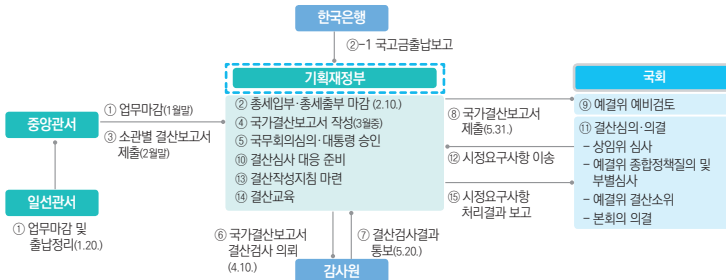
결산보고서	부속서류
세입세출결산	계속비 결산명세서, 세입세출결산 사업별실명서, 총액계상 사업집행명세서,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이월명세서,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정부기업특별회계회전자금운용명세서, 성인지결산서,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예비금 사용명세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 현물출자명세서, 재정증권의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의 운용명세서,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 등
기금의 수입지출결산	재원조성실적표, 성인지 기금결산서,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 등
국가결산보고서의 세입세출결산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의 수입지출결산 부속서류 외 통합재정수지표, 통합계정자금 운용 및 수익금사용명세서
재무제표	국가채무관리보고서,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국유재산관리운영보고서, 물품관리운영보고서



6. 국가 결산 과정을 알고 싶어요

-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기금을 통합한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중앙관서결산보고서'는 결산 개요,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이루어집니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합니다.
- 감사원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합니다.
- 정부는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를 반영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가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사하고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면 결산 절차가 종료됩니다.

그림 2-4 국가 결산 과정



*자료출처: 2022회계연도 결산보고서 결산개요 및 2022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Ⅲ) 참고

7.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적용대상을 알고 싶어요

-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는 국가회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모든 회계(일반·특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일반회계란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 회계이며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고자 할 때 또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 회계입니다. 2023년 7월 현재 우리나라의 61개 정부 부처별로 하나의 일반 회계 또는 필요에 따라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또한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는 것으로서 2023년 7월 현재 국민연금기금이나 주택도시기금 등 총 68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적용대상인 전체 국가회계실체는 <별첨 2>의 국가회계실체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발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회계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공기관이 경우 K-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발생주의에 따른 결산을 수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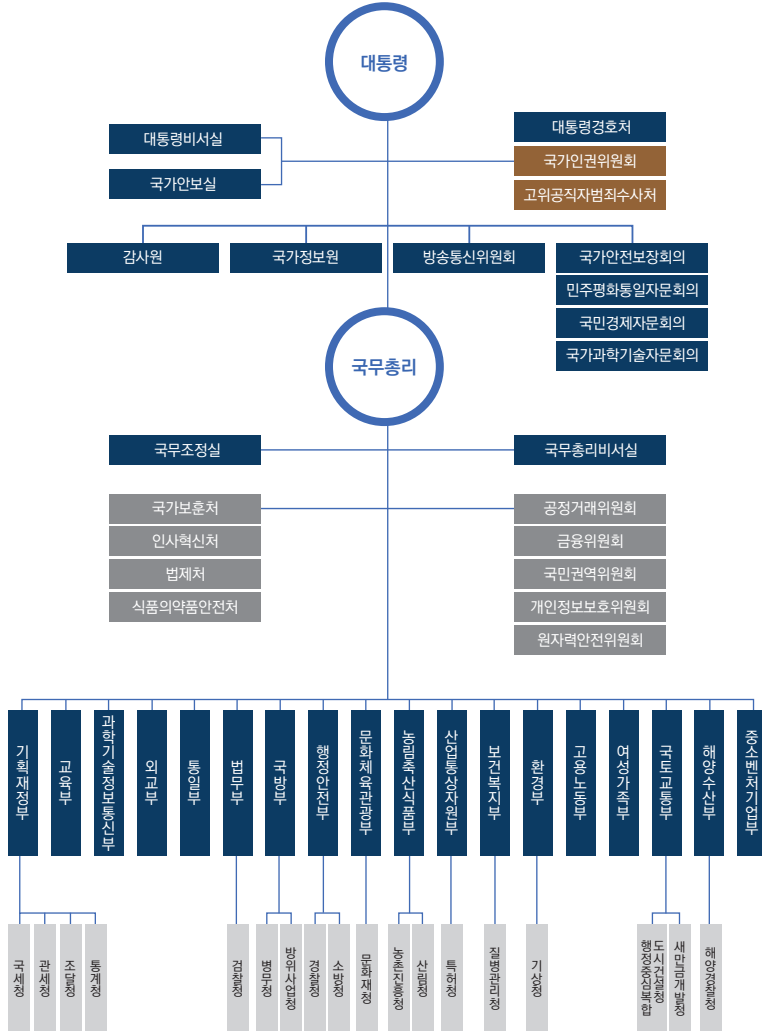


정부조직도상 정부부처 이외에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국가회계법 적용대상으로 포함됩니다.(2023년 7월 기준)





그림 2-5 정부조직도 2023년 6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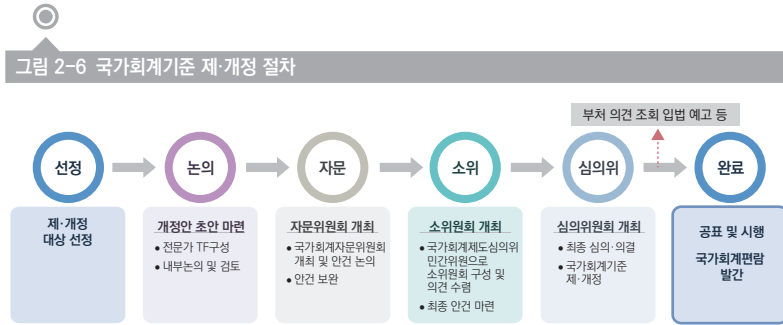


*자료출처: 정부24(<https://www.gov.kr/portal/orgInfo>)

8. 국가회계기준 제·개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국가회계기준 제·개정 절차

- 국가회계기준 및 국가회계예규의 제·개정은 매년 제·개정 대상 선정, 개정안 초안 마련, 국가회계제도소위원회 논의,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의결, 부처 의견 조회 및 입법 예고, 공포 및 시행, 국가회계편람 발간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안건의 중요성에 따라 특정 안건의 경우 전문가 검토 또는 국가회계자문위원회 논의 절차를 추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 국가회계법 제8조에 따라 국가회계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 위원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정부위원과 회계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서는 국가회계제도와 그 운영, 국가회계의 처리 또는 결산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간 회계 제도의 연계 등에 대해 심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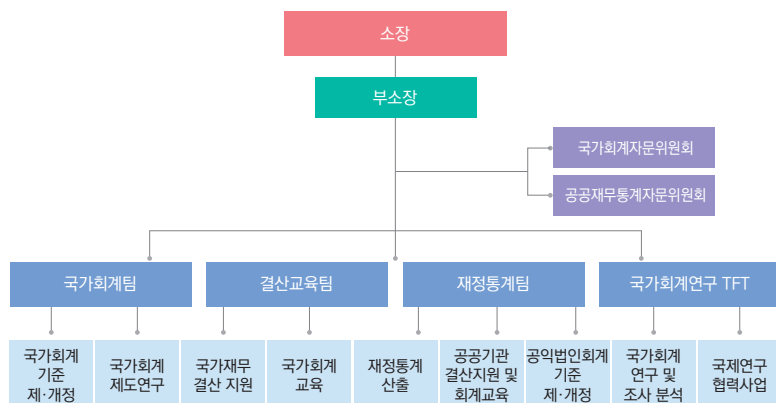
9.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운영 체계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1)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개요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근거하여 국내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업무, 결산 보고서의 분석에 관한 업무, 그 밖에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10년 7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국가회계기준센터로 출범 하였으며, 2014년 1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로 기능이 이관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조직은 센터 소장, 부소장 및 4개 팀(국가회계팀, 결산교육팀, 재정통계팀, 국가회계연구TFT)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회계팀은 국가회계기준 제·개정 및 국가회계제도 연구 업무, 결산교육팀은 국가 재무제표 작성 지원 및 국가회계 교육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정통계팀은 국제기준(GFSM 2001 및 PSDS 등)에 따른 재정통계 산출 및 연구, 공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 결산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회계연구 TFT는 국내외 국가회계 관련 조사·연구 업무 및 국제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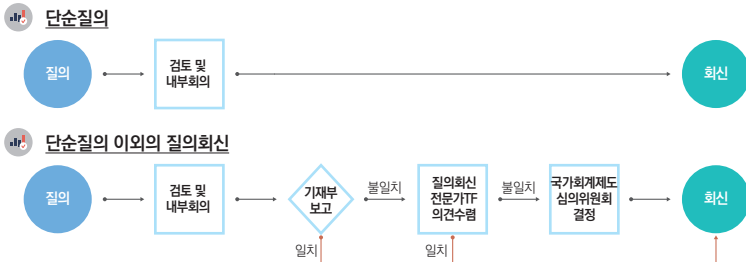
그림 2-7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조직도



(2) 질의회신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국가회계기준의 올바른 적용을 돕기 위하여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국가회계예규 관련 질의에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질의회신 업무는 국가회계법 제11조제4항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되었습니다.
- 질의회신 업무는 특정 거래 및 사건에 적용해야 할 국가회계기준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동 기준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석을 제공합니다.
- 다만, 국가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유사한 거래에 적용되는 국가회계기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을 고려하여 회계처리 대안을 제시합니다.
- 단순질의의 경우 센터 내부 검토 및 회의를 거쳐 신속하게 회신되며, 단순질의 이외의 질의회신의 경우에는 내부검토 및 회의를 거쳐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에 보고한 후 회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통상 질의회신은 접수일로부터 14일(초일 산입하되,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이내에 기획재정부에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부적으로 이견이 존재하거나 기획재정부와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사안이 중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4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그림 2-8 질의회신 절차





(3) 국가회계자문위원회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회계자문위원회 및 공공재무통계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각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소장, 위원은 기획재정부 및 감사원 5급 이상 공무원, 회계 학계와 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회계학전공 교수 및 공인회계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소장이 추천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이 위촉합니다.
- 현재 국가회계자문위원회는 국가회계기준 및 회계처리지침에 관한 제·개정 방안, 대내외 국가회계기준 연구, 재무결산 작성 및 교육 지원 등 국가회계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10. 국가회계의 교육과정을 알고 싶어요

- 기획재정부는 국가회계법 제27조와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여 2010년부터 국가회계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회계교육이란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회계에 대한 기초지식을 제공하고, 2009년부터 도입된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에 대한 이해와 실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 국가회계교육은 집합교육(국가회계 전문교육, 국가회계 활용교육)과 찾아가는 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교육대상자는 회계에 관심이 있는 모든 공무원과 회계담당 공무원, 중앙관서 재무결산 담당 공무원, 국가회계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입니다.

(1) 국가회계 전문교육(집합교육)

- 국가회계 전문교육은 집합교육으로 2023년도의 경우에는 6월부터 10월까지 전국 7개 지역(서울, 광주, 대전, 제주, 부산, 대구, 세종)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총12차에 걸쳐 실시되며, 국가회계 이론·국가회계실무·재무결산실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 2-4 국가회계 전문교육 커리큘럼

구분	국가회계이론	국가회계실무	재무결산실무
대상자	회계에 관심이 있는 모든 공무원	회계담당 공무원	중앙관서 재무결산 담당 공무원
목 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회계처리능력 제고	담당 공무원의 질적 역량 강화	업무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해결 능력 향상
소요 시간	2회차(총 14시간)	1회차(총 7시간)	2회차(총 12시간)
교육 과정	(1일차)	(1일차)	(1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주의 회계제도 기초 • 국가회계제도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유형별 오류사례 및 해결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지출(1,2,4~8,10차 교육) - 국유재산·물품(3,9차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결산의 이해 • 2023회계연도 재무결산 주요 유의사항 • 감사원 지적사례
	(2일차)	(2일차)	(2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재무정보 기초사례 연습 • 세입세출 거래와 복식부기 • 결산조정과 발생주의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거래 실무 • 결산조정분개 • 결산보고서 작성



(2) 국가회계의 활용(집합교육)

- 국가회계의 활용 과정은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급과정으로 국가회계이론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이 수강하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10월 중에 한 회차 진행하며 6시간 동안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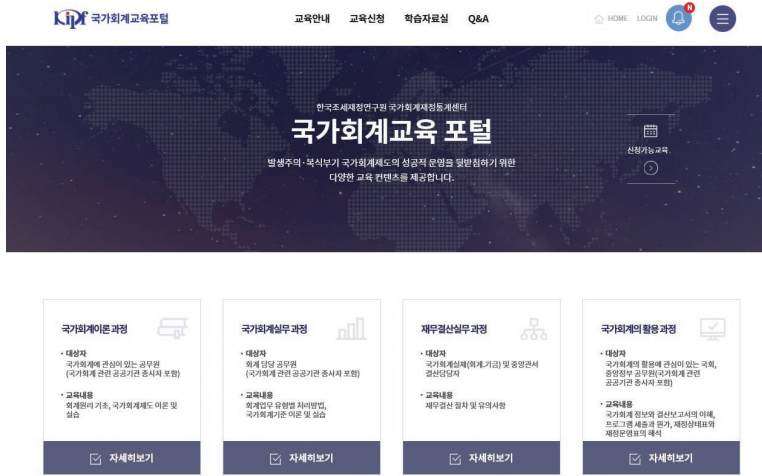
(3) 찾아가는 국가회계교육

- 찾아가는 국가회계교육은 국가회계 관련 교육을 필요로 하는 부처에서 요청하면 직접 찾아가 교육을 제공하는 맞춤형 교육서비스입니다. 국가회계 관련 교육을 필요로 하는 부처에서 국가회계교육 홈페이지를 통하여 원하는 날짜와 시간, 장소, 교육내용을 정하여 신청하면 교육 실시 여부를 검토한 후 요청한 기관을 찾아가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기타

- 국가회계 전문교육을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이버 교육 영상(국가회계이론 기초 과정, 업무유형별 오류사례 및 해결방안)도 국가회계교육 홈페이지에서 수강이 가능합니다.
- 국가회계교육 홈페이지에 K-MOOC의 '시민을 위한 정부회계' 사이버 강좌를 연동 해두어 국가회계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라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 국가회계 교육과정 안내 및 수강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회계교육 홈페이지 (<https://www.kipf.re.kr/edu/>)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림 2-9 국가회계교육 관련 홈페이지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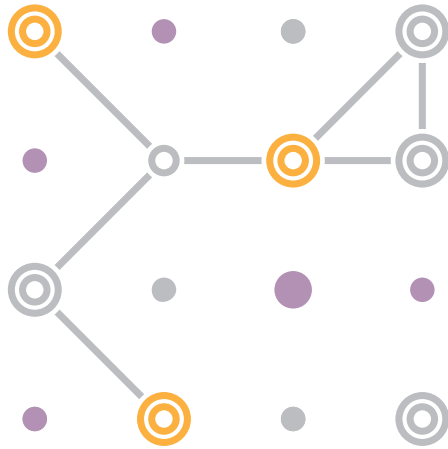
알기 쉬운 국가회계

Government Accounting



Part 03

국가 재무제표 들어다보기



03 국가 재무제표 들여다보기

1. 국가 재무제표를 알고 싶어요

- 국가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및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무제표에 추가하여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 부속서류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 재정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보여 주는 보고서로서 기업의 재무상태표와 유사합니다. 재정상태표를 통해 자산과 부채의 구성 현황 및 규모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재정상태를 한눈에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 재정운영표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와 대응되는 보고서로 일정기간의 수익, 비용 현황을 보여주며, 특히 프로그램별 원가정보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순자산변동표는 순자산의 변동 내역을 보여주는 보고서로서 기업의 자본변동표와 유사합니다.
- 주석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과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입니다.
- 각 부처는 중앙관서 전체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소관에 속하는 국가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중앙관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며, 국가는 이러한 중앙관서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국가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작성주체에 따라 재무제표의 양식과 포함되는 정보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종류)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주석

- 재무제표는 법령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하나의 항목으로 작성 및 제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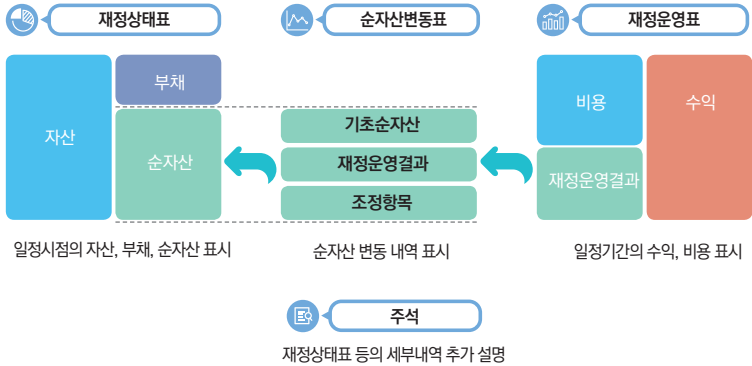


표 3-1 국가결산보고서의 구성

국가결산보고서	
I. 결산 개요	
II.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	
III. 재무제표	제1장 재무제표
	제2장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3장 필수보충정보
	제4장 부속명세서
IV. 성과보고서	

*자료출처: 국가회계법 및 결산작성지침 참고

그림 3-1 재무제표의 관계



국가 재무제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가 재무제표는 기획재정부 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 홈페이지 또는 국가 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열린재정: 재정연구분석>재정자료실>재정보고서 · 문서 - 국가결산보고서 검색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td/UOPKOFDA03>]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결산·교육>국가결산정보>국가 재무제표
[https://gafsc.kipf.re.kr/gafsc/settlementedu_Explanation.do]



2. 국가 재무제표와 중앙관서 재무제표 간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 국가 재무제표는 중앙관서 재무제표를 통합하고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작성되므로 큰 틀에서 본다면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양식과 포함되는 정보 측면에서 몇 가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 먼저, 중앙관서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반면, 국가 재정운영표는 중앙관서별 재정운영순원가를 바로 표시합니다. 61개 부처의 627개 프로그램원가 정보를 모두 표시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양식이 서로 상이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순자산변동표 구성에도 차이가 있는데, 국가의 순자산변동표는 기초순자산, 재정운영 결과, 조정항목, 기말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중앙관서의 경우에는 '재원의 조달 및 이전' 항목이 추가로 표시됩니다. 국가의 통합 관점에서는 '재원의 조달 및 이전' 역시 재정운영결과에 해당하나, 중앙관서의 경우 당기 재정운영결과가 아닌 순자산 증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또한, 국세를 징수하는 중앙관서(국세청, 관세청, 기획재정부)는 국세징수활동표를 필수보충정보로 작성하고 있지만 국가재무제표에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재무제표의 통합 관점에서 국가재정의 직접적인 수입원으로 국세징수활동표가 아닌 국가 재정운영표상 비교환수익 등의 국세수익으로 직접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 마지막으로 부속명세서 중 자원별원가명세서는 중앙관서 결산보고서에서는 제공하지만 국가결산보고서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표 3-2 중앙관서와 국가의 재무제표 작성 항목 비교

재무제표 구분	국 가	중앙관서	비 교
재정운영표	-	I. 프로그램순원가 II. 관리운영비 III. 비배분비용 IV. 비배분수익	프로그램원가정보 등은 양이 방대하여 국가 재정운영표 제공불가
	I. 재정운영순원가	V. 재정운영순원가	-
	A 중앙관서 B 중앙관서 ⋮	-	국가는 재정운영순원가를 중앙관서별로 표시
	II. 비교환수익 등	VI. 비교환수익 등	-
	III. 재정운영결과(I - II)	VII. 재정운영결과(V - VI)	-
순자산변동표	I. 기초순자산	I. 기초순자산	-
	II. 재정운영결과	II. 재정운영결과	-
	-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일반회계는 순자산변동표에 표시
	III. 조정항목	IV. 조정항목	-
	IV. 기말순자산(I - II + III)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
필수보충정보	7개 항목 (국세징수활동표 미작성)	8개 항목	국세청, 관세청, 기획재정부만 작성
부속명세서	12개 항목 (자원별원가명세서 미작성)	13개 항목	-



3. 재정상태표는 무엇인가요?

- 재정상태표는 기업에서 말하는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와 유사합니다.
- 재정상태표는 특정시점의 재정상태를 나타낸 재무제표로서, 재정상태표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재정상태표일 기준 자산과 부채, 순자산의 구성현황 및 규모(금액)를 알려줍니다.
- 재정상태표는 복식부기에 의해 작성된 회계정보를 통합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산총액과 부채 및 순자산의 합계가 동일하게 됩니다.
- 중앙관서의 재정상태표와 국가의 재정상태표는 양식이 동일합니다.

그림 3-2 2022회계연도 재정상태표 요약

재정상태표(2022년)		(단위: 조원)		
구분	'21년(A)	'22년(B)	증감액(B-A)	
자 산	2,866	2,834	△32	
유동자산	566	514	△52	
투자자산	1,168	1,149	△19	
일반유형자산	704	710	6	
사회기반시설	410	423	13	
무형자산	3	3	-	
기타비유동자산	15	35	△20	
부 채	2,195	2,326	131	
유동부채	187	220	33	
장기차입부채	756	812	56	
장기총당부채	1,198	1,243	45	
기타비유동부채	52	51	△1	
순 자 산	671	508	△163	

*자료출처: 2021년 국가결산보고서

(1) 자산의 정의, 종류 및 표시

- 국가회계에서 자산은 국가가 소유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원으로, ①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②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기업회계에서는 ①에 해당하는 경우만 자산으로 인식하는데, 국가회계에서는 ②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도 자산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사회기반시설(도로, 공항, 항만 등)이 자산에 포함되어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표시됩니다.



국가의 자산은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업무에 이용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산도 포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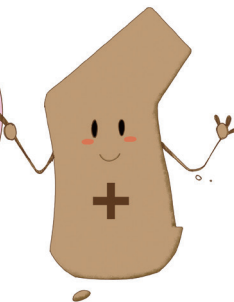


그림 3-3 자산으로 기록되는 기준



현금화가 가능한 경우
업무에 이용되는 경우

[일반적인 회계기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국가회계의 특성]



- 자산은 재정상태표상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 재정상태표상 자산의 표시원칙은 유동성 배열과 총액주의입니다. 유동성 배열이란 현금으로 전환하기 쉬운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정상태표를 유동성 배열에 따라 작성하면 유동자산을 1년 후에 현금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과 구분 표시함으로써 보다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총액주의는 관련되는 상대 항목을 상계하지 않고 총액 그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대여금의 경우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대여금과 대손충당금 금액을 각각 보여 주고 있습니다.

표 3-3 재정상태표상 자산의 종류 및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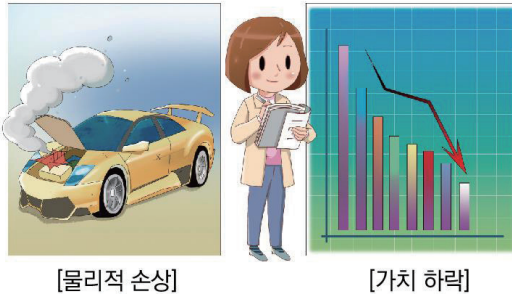
자산의 종류	설명
유동자산	재정상태표일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단기투자증권, 미수채권, 단기대여금 및 기타유동자산 등을 말한다.
투자자산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장기금융상품, 장기투자증권, 장기대여금 및 기타투자자산 등을 말한다.
일반유형자산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차량운반구, 전비품, 기타일반유형자산 및 건설중인 일반 유형자산 등을 말한다.
사회기반시설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으로서,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하천, 상수도, 국가여항, 기타 사회기반시설 및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등을 말한다.
무형자산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자산으로서, 산업재산권, 광업권, 소프트웨어, 기타무형자산 등을 말한다.
기타비유동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말한다.

(2) 자산의 평가기준

-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합니다. 즉, 객관적인 거래가격을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취득 이후에 그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자산의 물리적인 손상이 일어나거나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해당 자산의 회수 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을 그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의 과목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며 감액명세를 주석으로 표시합니다.



그림 3-4 취득원가보다 장부가액이 낮게 조정되는 경우



- 이러한 경우에 시장가치의 하락에 따른 감액만 있고, 시장가치의 상승에 따른 재무제표에 가치 증가 표시의 건은 없을까요? 답은 있습니다. 증가 표시될 수 있는 예로는 투자목적의 투자증권의 경우와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재평가하는 경우로서, 공정가액으로 측정하여 증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평가하는 경우 그 가치가 증가되어 표시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최초 재정상태표에 기록 시 취득원가를 기초로 기록한 후에는 재평가 등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재정상태표가 공정가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부채의 정의, 종류 및 표시

- 국가회계에서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국가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를 말합니다.
- 부채는 계약이나 법령에 따라 지출이 확정된 채무뿐만 아니라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하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산정된 금액도 포함합니다.
- 따라서 국채 등과 같이 계약에 따라 금전적 지불의무가 있는 채무뿐만 아니라 총당부채와 같은 잠재부채도 국가의 부채로 인식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재정건전성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국가의 부채는 금전적 지불의무가 있는 채무뿐만 아니라 총당부채와 같은 잠재부채도 부채로 인식합니다.

- 재정상태표상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총당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국가의 부채를 종류별로 구분하면, 국·공채, 차입금, 미지급금 및 선수수익 등과 총당부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재정상태표상 부채의 표시원칙도 자산과 동일하게 유동성 배열로 1년 이내의 지출 예상분과 1년 후의 지출 예상분을 구분하여 표시하며, 부채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만기 상환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총당부채 등은 각 총당부채 성격에 맞는 평가방식으로 평가를 수행합니다.



표 3-4 재정상태표상 부채의 종류 및 설명

자산의 종류	설명
유동부채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확정부채로서, 단기국채, 단기공채,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및 기타유동부채 등을 말한다.
장기차입부채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확정부채로서, 국채, 공채, 장기차입금 및 기타장기차입부채 등을 말한다.
장기총당부채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서, 퇴직급여총당부채, 연금총당부채, 보험총당부채 및 기타장기총당부채 등을 말한다.
기타비유동부채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로서,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및 장기총당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채를 말한다.

(4) 순자산의 의미와 구분

- 재정상태표상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순자산'이라고 합니다. 기업회계에서 자본은 주주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지표로 사용 됩니다.
- 그러나 국가의 경우 이익을 추구하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순자산이 크다는 것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이 높다는 것으로 단순 해석되기도 국가자산과 국가부채의 균형을 설명하거나 세대 간 부의 이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 따라서, 순자산이 부(負)의 금액이 되면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상태이며, 이는 현세대가 미래세대에게 부채를 넘겨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국가회계에서 순자산은 부의 세대 간 이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 순자산은 기본순자산, 적립금및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됩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시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적용이 되었다면 기본순자산이 최초 연도 당시의 자산 금액으로 기록되었겠지만, 애석하게도 2009년 1월 1일부터 재무제표 작성이 시작되어 2009년 1월 1일 기준 잔여재산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금과 기업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 이전에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적하여 발생한 적립금및잉여금을 차감하고 순자산조정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본순자산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잔여재산으로 국가회계에서 순자산은 부의 세대 간 이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표 3-5 순자산의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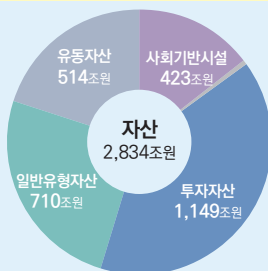
구분	설명
기본순자산	순자산에서 적립금및잉여금과 순자산조정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적립금및잉여금	임의적립금, 전기이월결손금/잉여금, 재정운영결과 등을 표시, 결산 시 재정운영표상의 재정운영결과가 적립금및잉여금에 반영된다.
순자산조정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재정운영표에 반영되지 않는 투자증권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및 기타순자산의증감 등을 말한다.



2022회계연도 국가자산의 구성을 알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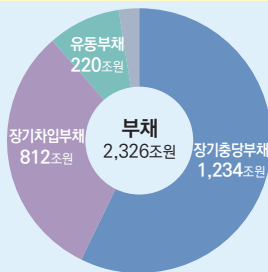
2022회계연도 국가자산은 총 2,834조원이며, 투자자산 1,149조원(41%), 일반유형자산 710조원(25%), 유동자산 514조원(18%), 사회기반시설 423조원(15%)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국가부채의 구성을 알고 싶어요



2022회계연도 국가부채는 총 2,326조원이며, 장기충당부채 1,234조원(54%), 장기차입부채 812조원(35%), 유동부채 220조원(9%)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재정운영표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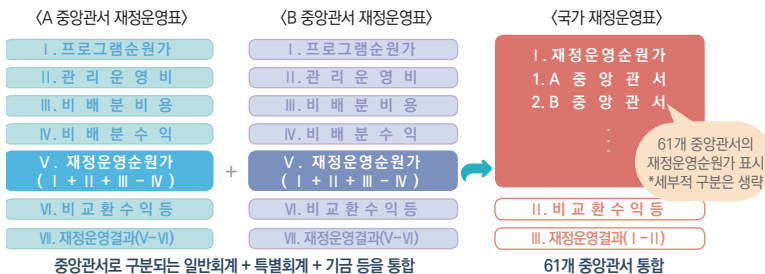
- 재정운영표는 한 해 동안 나라가 살림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결과를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재정운영표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와 대비될 수 있는데 손익계산서와 달리 비용에서 수익을 빼서 재정운영결과를 보여줍니다.
- 국가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요된 순원가 즉, 재정운영결과가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재정운영표의 양식을 개발하였습니다.
- 재정운영표는 작성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양식이 달라집니다. 중앙관서의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별 원가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이를 통합한 국가의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별 원가정보를 따로 보여주지 않고 중앙관서별 재정운영순원가를 제공합니다.
- 국가가 1년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2022 회계연도 기준 627개로 공식목적 재무제표에 모두 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프로그램별 원가정보는 각 중앙관서 재정운영표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 손익계산서) 이익 측정 목적
(국가 재정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및 재정운영결과 산출 목적



그림 3-5 재정운영표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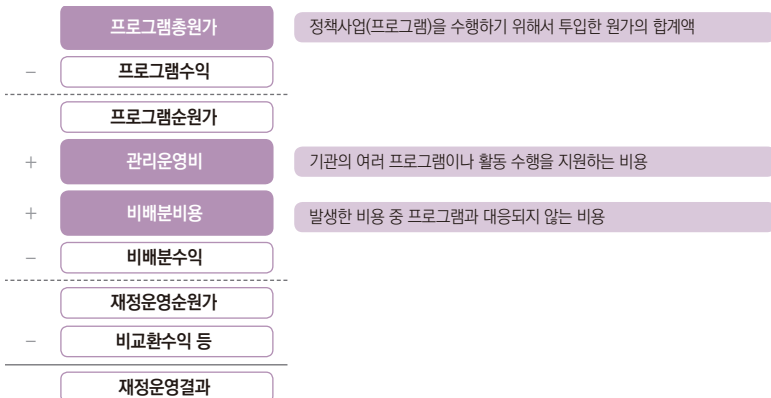
(1) 재정운영표에 나타나는 비용의 종류

- 재정운영표를 통해 보고되는 비용은 프로그램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먼저 프로그램총원가는 국가의 정책사업 단위인 프로그램(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원가를 말합니다. 국가의 존재 목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비용이기에 ‘원가’라고 구분하고 재정운영표의 가장 첫 머리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 그 다음 관리운영비는 기업의 판매비·관리비와 비슷한 개념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즉, 정부기관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인건비나 소모품비와 같은 행정운영경비가 관리운영비로 구분됩니다.
- 마지막으로 비배분비용은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비용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비용들을 말합니다.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순원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직접수혜자와 일반 납세자 부담분을 구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림 3-6 재정운영표상 비용의 종류 및 설명



(2) 재정운영표에 나타나는 수익의 종류

- 중앙관서별 재정운영표에 나타나는 수익 항목은 프로그램수익, 비배분수익, 비교환수익 등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먼저 프로그램수익이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말합니다. 프로그램 수익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복권기금의 복권사업수입을 들 수 있습니다.
- 그 다음 비배분수익은 앞서 설명한 비배분비용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수익들을 말합니다.
- 마지막으로 '비교환수익 등'은 비교환수익과 무상이전거래를 묶어서 보여주는 수익 항목입니다. 이 중 비교환수익은 국가가 국민에게 재화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수익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행사를 통해 걷어 들인 수익 즉, 교환 없이 발생한 수익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법인세, 소득세와 같은 국세를 들 수 있는데, 이는 국가가 징수하는 국세의 금액만큼 납세자에게 동일한 크기의 공공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무상이전거래란 중앙관서 간에 필요에 따라 재원을 이전하고 조달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말합니다.

그림 3-7 재정운영표상 수익의 종류 및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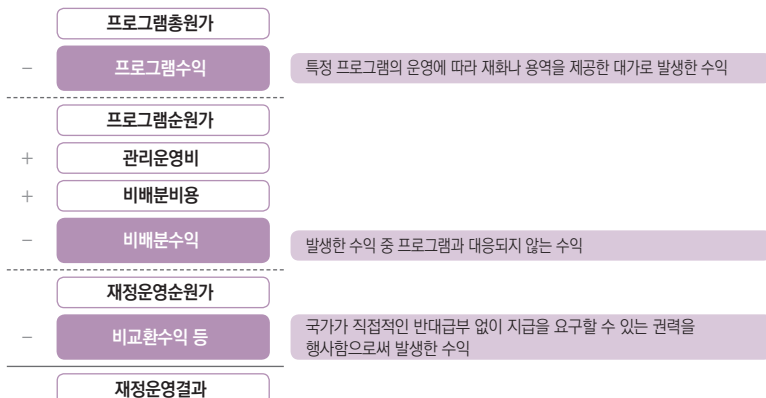




그림 3-8 2022회계연도 재정운영표 요약

693조원	(+) 프로그램총원가	프로그램수행 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145조원	(-) 프로그램수익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 있는 수익
548조원	프로그램순원가	
31조원	(+) 관리운영비	프로그램 수행을 지원하는 비용
19조원	(+) 비배분비용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비용
85조원	(-) 비배분수익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수익
513조원	재정운영순원가	
465조원	(-) 비교환수익등	비교환수익과 무상이전거래
48조원	재정운영결과	

* 국가의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총원가, 프로그램수익, 프로그램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을 표시하고 있지 않지만, 이해를 위해 중앙관서 또는 국가회계실체의 재정운영표 양식으로 제시

5. 순자산변동표란 무엇인가요?

- 순자산변동표는 한 해 동안 순자산의 변동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말하며, 기업의 자본변동표와 유사하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순자산변동표는 국가의 재정 건전성 분석과 현황 파악을 위해 순자산의 크기와 변동 내역을 표시합니다.
- 순자산변동표는 순자산의 구성요소인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별로 기초순자산에 전기오류수정이나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효과, 당해 연도의 재정 운영결과, 재원의 조달 및 이전, 그 외 조정항목들을 반영하여 기말순자산 금액을 보여 줍니다.
- 순자산변동표는 작성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구성 항목이 일부 달라집니다. 중앙관서의 순자산변동표상에서는 '재원의 조달 및 이전'으로 인한 변동이 표시되지만, 국가의 순자산변동표에는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이 나타나지 않고, 재정운영결과에 포함됩니다. 국가의 순자산변동표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비교환수익에 해당하는 재원의 조달은 재정운영표에 표시되고, 중앙관서 간의 무상이전거래는 내부거래로 보아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순자산변동표는 한 해 동안 순자산의 변동내역을 보여주는 재무제표입니다.



표 3-6 순자산변동표의 구성요소

구분	설명
기초순자산	전기에 이미 보고된 순자산 금액으로 증대한 전기오류수정사항이나 당기에 발생한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효과 등을 반영하여 조정
재정운영결과	재정운영표상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의 등을 차감한 금액
재원의 조달 및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원의조달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인 국세, 부담금, 기부금, 무상이전 및 제재금 등의 비교환수익과 예산배정액의 실제 집행액을 의미하는 국고수입을 말함 • 재원의이전은 순자산 감소효과를 발생시키는 중앙관서 간의 무상이전거래와 국고 이전지출을 말함
조정항목	<p>순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 중 재원의 조달 및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p> <p>(예) 납입자본의 증감, 투자증권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등</p>



표 3-7 2022회계연도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조원)

	기본순자산	적립금및잉여금	순자산조정	합 계
I. 전기 기초순자산	442	△158	221	505
1. 보고금액	442	△158	221	505
2. 전기오류수정손익	-	-	-	-
II. 재정운영결과	-	63	-	63
III. 조정항목	0	△29	258	229
1. 납입자본의 증감	-	-	-	-
2. 투자증권평가손익	-	-	59	59
3. 파생상품평가손익	-	-	△0	△0
4. 자산재평가이익	-	-	184	184
5. 기타순자산의 증감	0	△29	15	△14
IV. 전기 기말순자산(Ⅰ-Ⅱ+Ⅲ)	442	△250	479	671
V. 당기 기초순자산	442	△250	479	671
1. 보고금액	442	△250	479	671
2. 전기오류수정손익				
VI. 재정운영결과		48		48
VII. 조정항목	0	22	△137	△115
1. 납입자본의 증감	-	-	-	-
2. 투자증권평가손익	-	-	△102	△102
3. 파생상품평가손익	-	-	△0	△0
4. 자산재평가이익	-	0	△20	△20
5. 기타순자산의 증감	0	22	△15	7
VIII. 당기 기말순자산(V-VI+VII)	442	△276	342	508

6. 주식이란 무엇인가요?

- 주식은 국민 등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과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등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 주식의 중요한 내용으로는 재무제표 작성 시 적용한 중요한 회계정책이나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 그리고 중요한 정보나 숫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비재무적 정보가 포함됩니다.
- 중요한 회계처리방법 외에 주식사항의 예로는 장기차입부채의 상환계획, 장기충당부채,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전기오류수정 및 회계처리 방법의 변경, 순자산조정명세 등이 있습니다.



표 3-8 주식의 구성 내역

구분	주요내역
1. 중요한 회계처리방법	일반기준, 계정과목별 인식, 평가 기준 등
2. 장기차입부채 상환계획	국·공채, 차입금 등 상환계획
3. 장기충당부채	연금, 퇴직급여, 보험, 보증 등 충당부채 내역
4.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외화별 자산 및 부채 내역
5.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지급보증, 파생상품, 담보제공자산 명세를 포함한다)	계류 중인 소송사건, 중요한 계약사항, 최소운영수입 보장 내역(BTO) 등 우발사항
6. 전기오류수정 및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전기오류수정내역 및 회계정책, 추정 변경 내역
7. 순자산조정명세	투자증권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등 순자산조정 증감명세
8. 기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세입·세출의 현금, 세입·세출의 거래, 자산재평가, 융자사업, 사회보험사업, 정부조직개편, 기타사항 등



7. 재무제표에 추가하여 제출되는 자료는 무엇이 있나요?

(1) 필수보충정보

- 재무제표의 부속서류 중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에는 표시하지 않지만,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 필수보충정보는 유산자산의 종류·수량 및 관리상태, 연금보고서, 보험보고서, 사회보험보고서, 국제징수활동표,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 등이 있습니다.

표 3-9 필수보충정보의 구성

구 분	설 명
1.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상태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 상태를 별도의 명세로 작성하여 공시한다.
2. 연금보고서	연금사업 개요, 기금운용 사항, 연금충당부채 및 장기재정추계 산정 내역 등 연금사업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3. 보험보고서	보험별 인수위험의 개요, 보험충당부채 산정 내역 등 보험사업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4. 사회보험보고서	사회보험사업의 개요, 재원조달 방법, 사회보험부채 산정 내역 등 사회보험부채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5. 국제징수활동표	국세를 징수하는 활동으로 인해 당해 발생한 회수가능세금(국세수익) 중 실제로 징수하여 국고에 귀속된 세금(국고이전지출)을 나타내는 명세서로 국제 징수기관인 국제청, 관세청 및 기획재정부에서 작성한다.
6.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는 현금주의 예산결산의 산출물인 총잉여금(현금증감)과 발생주의 재무결산의 산출물인 재정운영결과(이익)의 차이를 성격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명세서를 말한다.
7.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원가의 성질별 구분에 따른 금액정보를 보여준다.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총원가와 프로그램수익을 구성하는 수익·비용을 성질별로 작성하는 것으로 나머지 관리운영비, 비배분 수익·비용 등은 재무제표상의 재정운영표와 동일하다.
8. 그 밖에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아니 하였으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 하천 토지 중 가격평가 제외 자산 현황, 국유재산 위탁 개발 사업 현황 등을 공시한다.

(2) 부속명세서

- 재무제표에 추가하여 작성하는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 명세를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표3-10과 같이 회계과목의 세부적인 금액과 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주요한 회계정책과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하는 것인데 반해,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내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표 3-10 부속명세서의 구성 내역

구 분	세부내역
1. 현금및현금성자산명세서	
2. 금융상품명세서	
3. 단기투자증권명세서	1) 채무증권명세서 2) 지분증권 및 기타단기투자증권명세서
4. 장기투자증권명세서	1) 채무증권명세서 2) 지분증권 및 기타장기투자증권명세서
5. 미수채권명세서	1) 단기미수채권명세서 2) 장기미수채권명세서
6. 대여금명세서	1) 단기대여금명세서 2) 장기대여금명세서
7. 일반유형자산명세서	1) 일반유형자산 당해연도증감명세서 2) 일반유형자산 직전연도증감명세서 3) 일반유형자산 보유토지의 공시지가 4) 금융리스자산명세서 5)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명세서
8. 사회기반시설명세서	1) 사회기반시설 증감명세서 2)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명세서
9. 무형자산명세서	1) 무형자산 당해연도증감명세서 2) 무형자산 직전연도증감명세서
10. 국채및공채명세서	1) 단기국채및공채명세서 2) 장기국채및공채명세서
11. 차입금명세서	1) 단기차입금명세서 2) 장기차입금명세서 3) 금융리스부채 연도별 상환계획 4) 운용리스로 연도별 지급계획
12. 출연비명세서	
13. 자원별원가명세서(국가결산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고 중앙관서 결산보고서에만 포함됨)	

알기 쉬운 국가회계

Government Accounting



Part 04

주요 계정과목 살펴보기





04 주요 계정과목 살펴보기

01절 자산

1. 투자자산

- 투자자산은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후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말하며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증권, 기타투자자산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 국가자산 중 41%를 구성하는 투자자산은 국민연금기금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공공자금관리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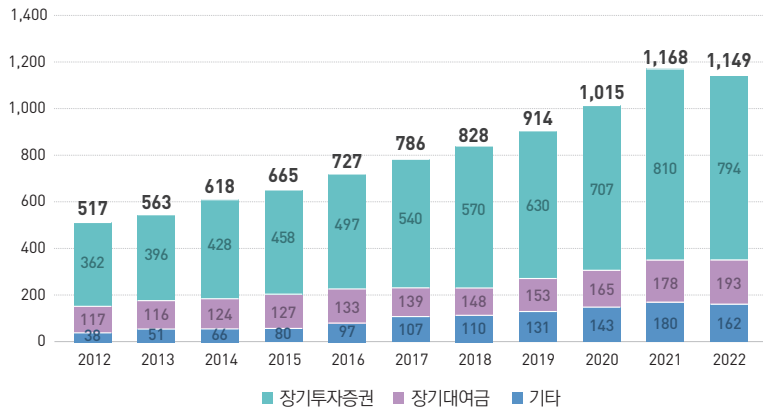


투자자산은 금융상품, 대여금, 투자증권 등 투자 또는 권리 행사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후까지 보유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그림 4-1 연도별 투자자산 규모

(단위: 조원)



(* 기타: 장기금융상품, 기타투자자산)

(1) 금융상품

- 금융상품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에금, 정기적금 등으로 재정상태표일 기준으로 만기 1년 이내인 금융상품은 단기금융상품으로 유동자산에 표시하고, 만기 1년 초과인 금융상품과 질권설정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등은 장기금융상품으로 투자자산에 표시합니다.

표 4-1 금융상품 계정과목 내역

금융상품	설명
정기에금	예금주가 일정기간 환급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일정 금액을 은행에 예치, 은행은 이에 대하여 일정 이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증서 또는 통장을 발행, 교부하는 예금
정기적금	일정 금액을 계약하고, 일정기간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여 기간 만료 후에 계약금액을 환불받는 예금
기타의 금융상품	양도성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 환매조건부채권, 어음관리구좌(CMA), 신종 기업어음(Commercial Paper) 등

(2) 대여금

- 대여금은 유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의 금전에 대한 채권으로 회수기일이 1년 이내인 대여금은 단기대여금으로 유동자산에 표시하고, 회수기일이 1년 초과인 대여금은 장기대여금으로 투자자산에 표시합니다.

표 4-2 대여금 계정과목 내역

대여금		설명
전대차관 대여금	정부내 전대차관대여금	공공자금관리기금(차관계정)이 외국환은행 등 차관선으로부터 도입한 전대차관(계정분류상 "해외차입금") 중 다른 국가회계실체에 다시 대여한 자금
	정부외 전대차관대여금	공공자금관리기금(차관계정)이 외국환은행 등 차관선으로부터 도입한 전대차관(계정분류상 "해외차입금") 중 국가회계실체가 아닌 통화금융기관, 비통화 금융기관 및 기타 민간분야, 지방자치단체에게 다시 대여한 자금
정부내예탁금		전대차관대여금을 제외한 다른 국가회계실체에게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용자금	저리용자금	대여 당시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용자금
	일반용자금	저리용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용자금



(3) 투자증권

- 투자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등을 말하며, 재정상태표일 현재 만기가 1년 이내는 유동자산으로 표시하고, 재정상태표일 현재 만기가 1년 초과이거나 1년 후 처분 예정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기타장기투자증권 등은 투자자산으로 표시합니다.



표 4-3 투자증권 계정과목 내역

투자증권	설 명
채무증권	자금운용의 목적으로 취득한 발행자에 대하여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지분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또는 조합 등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 (예: 보통주, 우선주 등) • 일정금액으로 소유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신주인수권 또는 콜옵션)를 나타내는 유가증권 • 소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예: 풋옵션)를 나타내는 유가증권
기타 장기투자증권	자금운용 또는 법령 및 정책적 목적이 아닌 국제 물납 등 기타사유에 따라 취득한 유가증권

(4) 기타투자자산

- 기타투자자산은 투자자산 중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투자자산을 의미합니다.



표 4-4 기타투자자산 계정과목 내역

기타투자자산	설 명
투자회원권	사용 및 매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회원권(예: 골프회원권)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이란 국공채, 통화, 주식 등 기초자산의 가격이나 자산가치 지수의 변동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계약(예: 선물, 옵션, 스왑)
신탁사업수익권	부동산 신탁 등 신탁의 이익을 기대하고 설정한 수익권
기타의기타투자자산	투자회원권, 파생상품자산, 신탁사업수익권에 속하지 않는 기타투자자산

유가증권의 평가기준

- 투자목적의 단기투자증권 또는 장기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는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합니다. 이 때 공정가액이란 일종의 시가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투자목적이 아니거나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없는 유가증권은 취득원가로 표시하게 됩니다. 국가가 보유하는 대부분의 유가증권은 시세차익의 목적보다는 권리 행사의 목적으로 보유하기 때문에 공정가액 평가의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또한, 공정가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공정가액 평가 업무가 필요한데, 공정가액 평가자체도 어렵습니다.

유가증권의 종류	최초 취득 시 평가 방법
채무증권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
지분증권	취득원가
기타투자증권	취득원가

* 상각후취득원가란 채무증권의 취득원가에서 할인 또는 할증차금의 상각누적액을 가산 또는 차감한 금액입니다. 할인 또는 할증차금은 최초 취득원가와 만기 액면가액의 차이를 말합니다. 채무증권을 상각후취득원가로 측정할 때에는 취득 원가와 만기 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합니다.



2. 유동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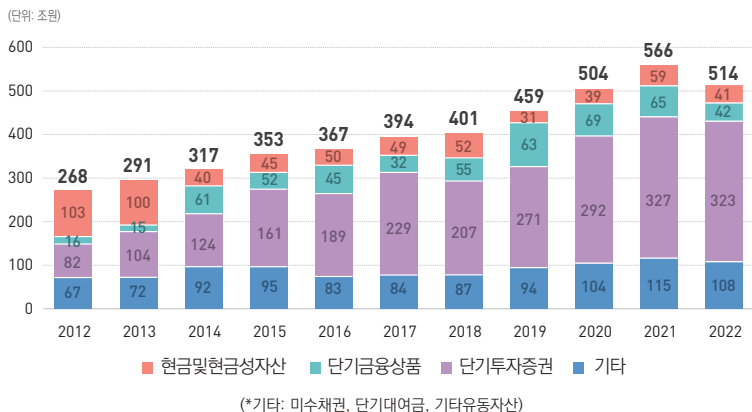
- 재정상태표 작성원칙은 앞서 설명하였듯이 유동성 배열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재정상태표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유동자산은 현금화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자산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동자산의 분류기준은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입니다.
- 유동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단기투자증권, 미수채권, 단기대여금 및 기타유동자산 등을 말하며, 국고금은 현금및현금성자산에 포함되어 표시됩니다.
- 단기금융상품, 단기투자증권, 단기대여금은 앞에 '단기'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 회수될 것으로 생각되는 금융상품, 투자증권, 대여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년 후에 회수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장기'로 표시합니다.



유동자산은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을 말합니다.



그림 4-2 연도별 유동자산 규모





취득 당시는 만기가 2년이어서 투자 자산으로 기록하였는데 1년이 지나서 만기가 1년 이내가 되는 경우 어떻게 하죠?



매 회계연도 말에 각 상품들에 대해서 만기를 다시 조사하여 1년 이내 현금화 될 것으로 파악되는 것은 유동자산으로 바꿔 표시해 줍니다. 회계적 용어로는 '유동성 대체' 라고 합니다. 부채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수채권 등의 평가기준

- 미수채권, 단기대여금 또는 장기대여금은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평가합니다.
- 대손이란 채무자의 잠적 혹은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가 어려워진 채권금액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손은 미래에 받지 못할 수 있는 채권금액을 미리 추정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미수채권 등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결과적으로 회수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표시되므로 경제적 실질을 보다 잘 반영하게 됩니다.
- 융자금의 경우에는 융자사업에서 발생한 융자금 원금과 회수가능액의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융자보조원가충당금으로 설정하여 평가합니다. 이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은 실질적으로 융자기간에 걸쳐 융자사업을 통해 국가가 보조해 줄 이자비용의 현재가치 금액을 말합니다.



3. 일반유형자산

- 일반유형자산이란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차량운반구, 전비품 등으로 구분됩니다.
- 일반유형자산은 전비품을 관리하는 국방부와 국토의 이용 및 개발 등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국토교통부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일반유형자산 중 전비품과 같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3항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산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표 4-5 일반유형자산 계정과목 내역

구분	설명
토지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 등
건물	청사, 관사, 출장소, 주택 등
구축물	교량, 궤도, 저수지, 정원설비 등
기계장치	배전반, 전동기, 변압기 등
집기·비품·차량운반구	책상, 의자, 컴퓨터, 가전제품,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원동기 등
전비품	전쟁의 억제 및 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전문적인 군사장비와 탄약 등
기타일반유형자산	입목, 치안유지자산, 정부미술품·정부미화물품, 임차개발자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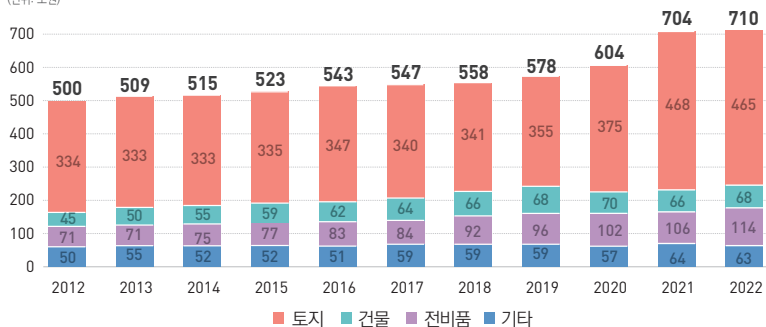


일반유형자산의 대부분은 토지(65%)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특수자산인 전비품(16%)과 국가의 행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자산(19%)인 건물 및 구축물, 집기와 비품, 차량운반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 4-3 연도별 일반유형자산 규모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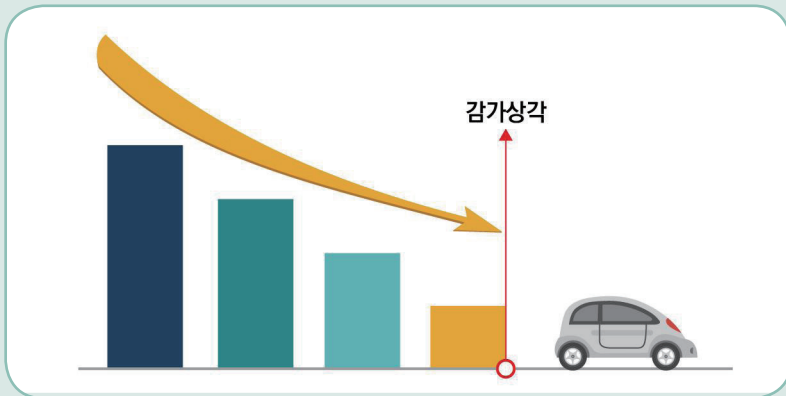


(*기타: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등)



일반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무형자산의 상각

- 일반유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건설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 원가로 하여 평가하고, 내용연수에 걸쳐서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합니다.
- 무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개발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평가하고, 내용연수에 걸쳐서 정액법을 적용하여 상각합니다. 이때 내용 연수는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감가상각(Depreciation)이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산의 가치 감소를 회계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경제학적으로는 자산의 가치 감소를 의미하나, 회계학의 관점에서 감가상각이란 취득한 자산의 원가를 자산의 사용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allocation)을 의미합니다.
- 대표적인 감가상각방법에는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는데, 정액법은 사용 가능한 기간동안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하는 방법이며, 정률법은 초기에 많은 금액을 감가상각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정액법을 사용하여 감가상각합니다.





정부청사의 재산가치는 얼마인가요?



2022년말 기준 정부청사 4곳의 재산가치 총합은 8조9천억원이며, 가장 최근 건립된 정부세종청사가 3조7천억원으로 1위입니다.

(단위: 억원)

순 위	건물명	장부가액	토지		비고
			토지	건물	
1	세종청사	36,783	20,475	16,308	1·2·3단계, 중앙동
2	대전청사	26,747	25,840	907	-
3	서울청사	15,677	14,688	989	-
4	과천청사	10,321	9,741	580	-



[정부세종청사]

4. 사회기반시설

- 사회기반시설이란 국가의 기반형성을 위하여 대규모 투자로 건설하고 파급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및 댐 등의 유형자산을 의미합니다.
- 사회기반시설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이전에는 어느 보고서에서도 금액으로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사회기반시설은 현금화가 되지 않는 자산이며(향후 매각 목적이 전혀 없으며, 수익창출도 없기 때문), 도난의 염려가 없기 때문에 기타의 자산과는 달리 장부에 기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 국가회계 상 자산은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을 포함하므로 사회기반 시설로 인하여 현금 유입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재무 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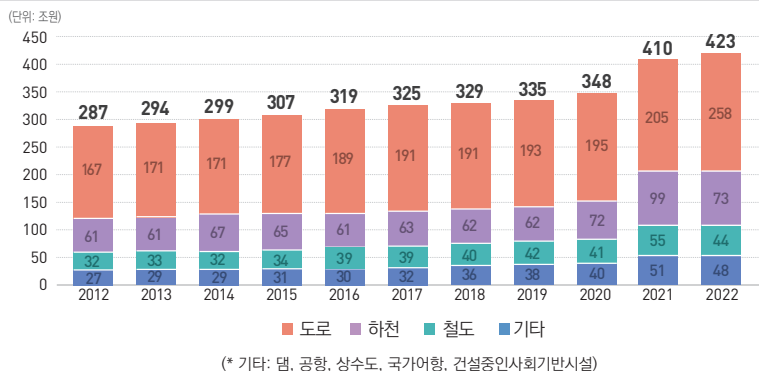
표 4-6 사회기반시설의 계정과목 내역

사회기반시설 종류	세부내역	관련법령
도로	일반국도, 고속국도	도로법
철도	일반철도(광역철도포함), 고속철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항만	지정항만	항만법
댐	다목적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공항	공항시설	공항시설법
상수도	광역상수도	수도법
하천	국가하천	하천법
국가어항	국가어항	어촌 어항법



- 발생주의 국가회계 도입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을 측정하고 표시하였고 이로써 423조원 (22년 기준)에 달하는 사회기반시설 자산의 전체 규모와 증감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회기반시설은 대부분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며,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일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림 4-4 연도별 사회기반시설 규모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철도의 재산가치는 얼마인가요?



2022년말 기준 경부고속철도가 7조5천억원으로 1위입니다.

(단위: 억원)

순 위	구 분	장부가액	비 고
1	경부고속철도	74,637	서울 ~ 부산
2	경부선	57,272	서울 ~ 부산
3	경의선	51,834	서울 ~ 도라산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재산가치는 얼마인가요?



2022년말 기준 경부고속도로가 12조2천억원으로 1위입니다.

(단위: 억원)

순 위	구 분	장부가액	비 고
1	경부고속도로	121,830	서울 ~ 부산
2	영동고속도로	81,606	인천 ~ 강릉
3	서해안고속도로	80,913	서울 ~ 목포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재평가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한 후 공정가액이 취득원가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거나,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이 일정주기(5년)를 정하여 재평가하기로 한 자산의 경우에는 재평가를 수행하고 공정가액으로 계상하게 됩니다.
- 다만,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시가격(공시지가 등)이나 상각후대체원가로 재평가하여 계상할 수 있습니다. 상각후 대체원가란 동일한 용역잠재력을 가진 자산을 현재시점에서 재취득 또는 재생산하는 경우 투입될 최적의 건설 원가액(재조달원가)에 물리적 감가 등을 반영한 방법을 말합니다.



5. 무형자산

- 무형자산이란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산업재산권, 광업권, 소프트웨어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 무형자산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유형자산과 달리 물리적 형태가 없습니다.



표 4-7 무형자산 계정과목 내

무형자산	설 명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무체재산권
광업권	일정한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동 광산 내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소프트웨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개발소프트웨어: 외부업체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구축한 전산 프로그램 등 • 외부구입소프트웨어: 외부에서 구입한 전산 패키지 등
기타무형자산	상기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무형자산으로서 국가의 행정목적 등으로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유형자산) 물리적 형태가 있고 국가에서 행정활동에 이용하는 자산
(무형자산) 물리적 형태가 없지만 국가에서 이용할 권리가 있는 자산



정부가 보유한 최고가 무형자산은 무엇인가요?



2022년말 기준 국토교통부의 국도 지능형 교통체계(ITS)가 1천909억원으로 1위입니다.

(단위: 억원)

순 위	무형자산명	장부가액
1	국도 지능형 교통체계(국토부)	1,909
2	차세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기재부)	802
3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단계(복지부)	485

*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 첨단교통기술로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화·자동화된 운영으로 교통 효율성·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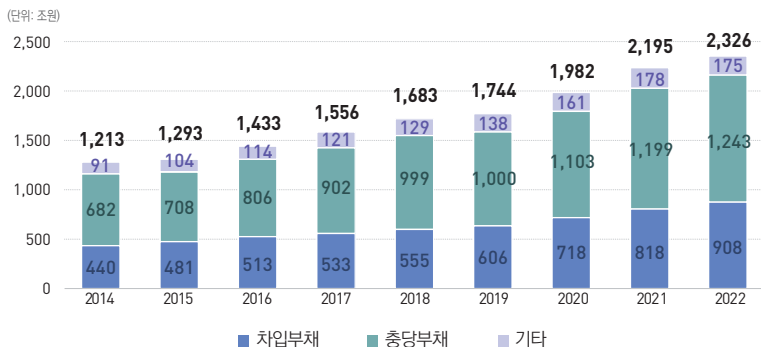


02절 부채

- 국가회계에서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국가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를 말합니다.
- 부채는 크게 지출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차입부채와 지출시기 또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합리적인 추정을 통해 평가하는 총당부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차입부채로는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 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공채 및 차입금 등이 있으며, 총당부채는 근로 대가에 따른 연금 지급 의무를 측정하여 인식하는 연금총당부채, 소송패소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인식하는 소송총당부채 등이 있습니다.
- 국가가 그 의무를 부담하지만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낮거나 신뢰성 있는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 공시합니다.



그림 4-5 연도별 부채 규모



1. 차입부채

- 차입부채는 국채, 공채 및 차입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는 국고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민주택채권 등이 있으며, 공채는 중소기업진흥채권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등이 있습니다. 차입금은 일정 기간 내에 원금 상환 및 이자지급을 약정하고 조달된 자금으로 간단히 빌려온 돈이라 볼 수 있습니다.
- 국채와 차입금은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의 회계제도 도입 이전에도 국가채무로 관리되던 부채로 정부의 기본적인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정보입니다.
- 단, 국가채무로 보고되는 국채는 총 발행금액으로 관리하지만 재무제표 상 국채 금액은 발행된 국채를 국가회계실체가 투자 등의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기국채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어 금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이 기금의 운용 목적으로 국채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표 4-8 연도별 국공채 및 차입금 규모

(단위: 조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국공채	436	477	509	529	551	603	715	816	905
국채	502	557	595	627	650	701	818	934	1,019
공채	33	29	26	22	19	19	19	20	21
자기국공채	(99)	(109)	(112)	(120)	(118)	(117)	(122)	(138)	(135)
차입금	4	4	4	4	4	3	3	2	2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 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는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자산과 부채의 금액이 계약 등에 의하여 일정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자산과 부채를 말합니다. 자산과 부채가 일정화폐액(예를 들어 100달러)으로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경우 환율의 등락에 따라 수취하거나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이를 재정상태표일 현재 환율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 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기준환율로 평가합니다.
- 비화폐성 외화자산과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화폐가치의 변동에 따라 화폐 평가액이 변동하는 자산과 부채를 말합니다. 물건을 구매하기 위하여 선금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관계없이 해당 물건을 구매할 수 있으므로 비화폐성으로 분류합니다.
-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자산과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취득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측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합니다.

2. 총당부채

- 장기총당부채는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 연금총당부채, 퇴직수당 총당부채, 소송총당부채, 보증총당부채 등이 있습니다.
-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의 회계제도 도입 이전에는 관리되지 않았던 부채로서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장기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총당부채를 인식함으로써 확정채무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재정상태 파악이 가능합니다. 총당부채로는 연금총당부채, 보험총당부채, 보증총당부채, 소송총당부채 등이 있습니다.



표 4-9 총당부채의 종류

(단위: 조원)

총당부채	2022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공무원연금총당부채	939.7	904.5
군인연금총당부채	241.6	233.6
퇴직수당총당부채	52.8	52.1
보증총당부채	5.6	5.5
소송총당부채	1.8	1.7
보험총당부채	0.6	0.8
퇴직급여총당부채	0.7	0.6
기타의기타장기총당부채	0.5	0.4
합계	1,243.2	1,199.4



(1) 연금총당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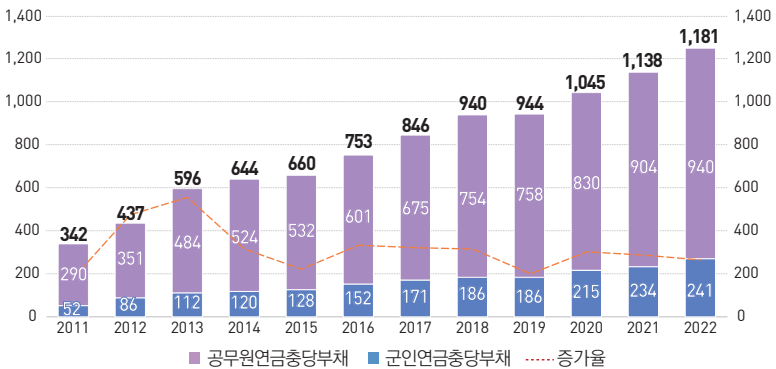
- 국가는 국가에 근로를 제공한 공무원과 군인에게 퇴직 시 연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연금총당부채로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미래연금지급액 전부를 연금총당부채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며, 기말 현재까지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연금총당부채로 인식합니다.
- 미래에 받을 연금 금액을 추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로 들면, 입사 후 언제까지 근무를 할지, 어느 직급까지 승진을 할지, 급여 상승률은 어떻게 될지 등의 많은 요소에 의해 연금금액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연금총당부채를 계상하려면 이러한 여러 가지 가정들이 필요하며 보통 과거 경험치와 시장 상황을 기초로 추정합니다. 이러한 가정들을 '보험수리적 가정'이라고 하며 이렇게 총당부채를 산정해 내는 방법을 보험수리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국가의 연금총당부채 측정방식과 개념은 기업회계상의 '종업원급여-확정급여채무'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림 4-6 연도별 연금총당부채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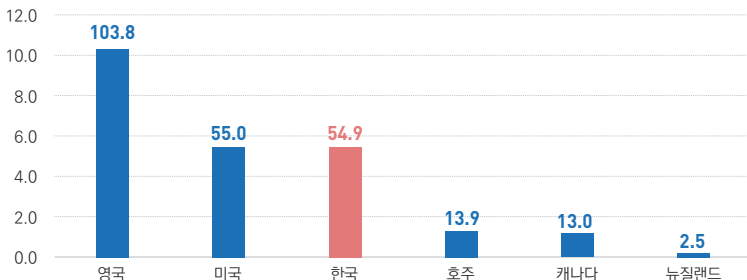


- 연금충당부채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많은 우려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금충당부채가 변동하는 원인은 크게 실질적 요인과 재무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연금충당부채의 증가는 실질적 요인이 평균적으로 대략 20%를 차지하는 반면, 재무적 요인은 평균 80%를 차지하여 대부분 재무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 요인은 1년 더 근무하여 받게 될 연금이 1년 치 커지거나, 공무원들이 늘어나거나 실제 연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에 따른 증감이며, 재무적 요인은 할인율, 물가 상승률, 보수상승률 등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 특히, 재무적 요인 중에서도 할인율의 영향이 가장 큼니다. 연금충당부채는 매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정하는 부채이므로 현재가치로 금액을 추정하게 되는 데 이때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2022회계연도 기준 할인율이 0.1%p 하락하면 연금충당부채는 26.8조원이 증가하게 되므로 연금충당부채의 증가를 좀 더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발생주의 도입국가들 중 미국, 영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도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으며,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하여 공시하는 나라들의 회계적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할인율은 미래 지급될 연금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표시하기 위해 필요한 이자율로 연금충당부채와는 서로 반대되는 방향을 가집니다. 즉, 할인율이 하락하면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림 4-7 국가별 GDP 대비 연금충당부채비율



*자료출처: 각 국가 결산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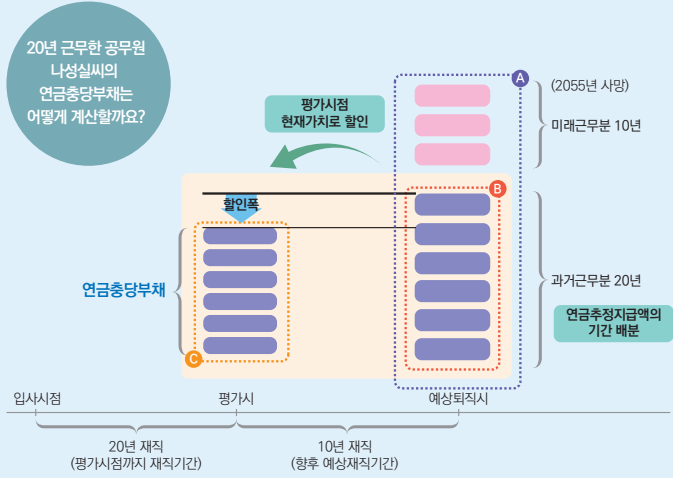


연금충당부채는 어떻게 산출이 되나요?



연금충당부채는 수급자와 재직자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이미 퇴직하여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현재 연금급여를 기준으로 평가시점 이후의 미래 예상액의 합계를 현재가치로 계산하면 되므로 비교적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반면, 재직자의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좀 더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아집니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의 연금충당부채 산출예시]



<평가시점에 20년을 재직한 공무원 나성실씨의 연금충당부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과거 경험치와 미래 예측을 통해 나성실씨는 얼마나 더 일하고, 얼마 동안 연금을 지급해야 할지 추정합니다.
(향후 10년을 더 근무하고, 25년(2055년) 동안 연금지급 예상됨)
- 향후 10년 더 일하는 것을 고려하여 받게 될 '연금급여액'을 산정하고 2055년까지 지급할 연금지급액을 고려하여 '총연금지급액'을 결정합니다. (A 부분)
- 평가시점인 현재에는 총 30년 예상근무기간 중 20년만 일한 상태이므로 해당부분만 국가의 의무가 됩니다. (B 부분 *퇴직시점 총 연금지급액의 2/3)
- 이를 현재가치로 전환하면 평가시점의 나성실씨의 연금충당부채가 산출됩니다. (C 부분)



연금총당부채에 국민연금·사학연금이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사학연금은 국가가 고용주체로서 제공하는 연금이 아닌 국가의 사회 보장정책의 일환으로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성격의 연금으로 연금 총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해외 사례에서도 사회보장급여제도에 대해 총당부채를 산정하지 않고 있어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고려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하므로 연금보고서를 통해 향후 연금 수입액과 연금 지출액을 추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국민연금
설치연도	1960	1960	1975	1988
가입대상	국가·지방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전 국민 (18세 이상 ~ 60세 미만)
가입자수(A)	128만명	19만명	33만명	2,250만명
수급자수(B)	62만 5천명	10만 4천명	10만 7천명	664만 3천명
관리운영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교육부 (사학연금공단)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회계실체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회계처리	연금총당부채 산정	연금총당부채 산정	연금총당부채 대상 아님	연금총당부채 대상 아님
거래실질	퇴직급여(근로제공대가)		사회보장성격	



(2) 퇴직수당총당부채

- 퇴직수당총당부채는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에 따라 공무원 및 군인이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수당에 대한 지급의무에 대한 부채입니다.
- 퇴직수당은 현재의 근로대가를 미래에 지급한다는 점, 지급 시기가 퇴직 시로 불확실하다는 점 등 일시불로 지급받는다는 점을 제외하면 연금과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공무원·군인연금총당부채의 산정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보험수리적 방법을 통해 언제까지 근무를 할지, 어느 직급까지 승진을 할지, 급여 상승률은 어떻게 될지 등의 추정을 통해 금액을 산정합니다.



표 4-10 연도별 퇴직수당총당부채

(단위: 조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31.7	32.7	44.4	47.9	51.1	48.4	49.0	52.1	52.7

(3) 퇴직급여총당부채

- 퇴직급여총당부채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용대상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연금총당부채와 퇴직수당총당부채는 공무원과 군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무원과 군인은 퇴직 시 퇴직금이 아닌 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퇴직급여총당부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퇴직급여총당부채는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 전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를 가정하여 총당부채를 산정하게 됩니다. 연금총당부채 또는 퇴직수당총당부채와 같이 보험수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하지 않는 이유는 국가의 근로자는 공무원과 군인이 대부분으로 그 규모가 크지 않아 추정에 대한 효익이 적고 신뢰성 있는 추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표 4-11 연도별 퇴직급여총당부채 규모

(단위: 억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4,433	4,847	4,118	4,615	4,929	5,847	6,262	6,482	6,850

(4) 보험충당부채

- 보험충당부채는 국가가 제공하는 보험사업에서 발생하는 충당부채로서 현재 농어업 재해재보험기금 및 무역보험기금 등이 산정 대상입니다.
- 보험충당부채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확정부채로 계상하지 못하는 부분과 장래 발생할 보험사고를 대비하여 적립하는 지급 예상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 즉, 보험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보험사건으로 인해 지출 금액과 지출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출될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추정하여 지급을 준비하여야 할 금액을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표 4-12 연도별 보험충당부채

(단위: 억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4,926	7,201	10,083	9,361	9,874	5,387	8,378	8,092	5,915

(5) 보증충당부채

- 보증충당부채는 국가가 제공하는 신용보증사업에서 발생하는 충당부채로서 현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이 산정 대상입니다.
- 국가의 신용보증사업은 일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 시 신용부족 등으로 차입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금융기관 등에 지급을 보증하는 사업으로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 보증충당부채는 약정 등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과 같은 사건으로 국가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부담하게 될 추정금액을 현재가치로 인식하게 됩니다.

표 4-13 연도별 보증충당부채

(단위: 억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37,627	44,688	51,107	47,556	45,198	44,913	55,060	55,495	55,746



(6) 소송충당부채

-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되어 향후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부담하게 될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금액을 소송충당부채로 인식하게 됩니다.
- 소송충당부채는 회계연도 결산일(12월31일)부터 1년 내 패소 가능성이 높은 소송의 패소 시 배상금액을 추정한 것입니다. 정부가 1:2심에서 패소해 최종심에서 이길 가능성이 낮거나 1심이 진행 중이어도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소송 등을 말합니다.
- 2022회계연도 정부가 피고인 소송 건수는 5,282건입니다. 부처별로는 법무부가 1,149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토교통부(617건), 국세청(374건), 보건복지부(357건) 등의 순으로 소송 건수가 많습니다. 법무부의 소송 건수가 가장 많은 이유는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법무부가 부처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2022회계연도에 정부가 패소 가능성을 고려하여 소송충당부채로 인식한 금액은 1조 7,735억원입니다.



표 4-14 연도별 소송충당부채 규모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건수 (단위: 건)	8,366	5,068	4,742	4,356	4,185	4,377	4,930	5,565	5,282
금액 (단위: 억원)	20,494	14,461	20,631	21,204	12,884	18,276	15,847	17,442	17,735

03절 재정운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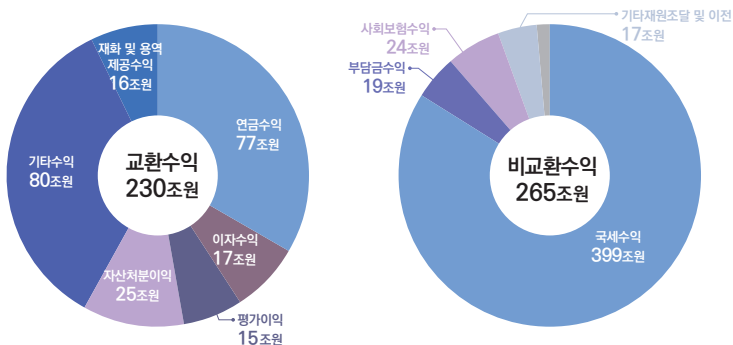
1.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

- 수익은 순자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 형태로 나타나는 회계기간 동안의 경제적 이익의 증가를 말합니다.
- 그런데 국가회계의 특징 중 하나는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법령에 따라 납부의무가 발생하여 수납하는 현금 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세나 제재금 및 부담금 등이 있습니다.
- 하지만, 기업의 경우에는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현금 등을 수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현금 등을 수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국가회계는 재화(상품이나 제품 등)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을 교환수익으로,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국세, 부담금 등을 비교환수익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가회계에서는 수익을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림 4-8 2022회계연도 교환수익 및 비교환수익의 구성





2. 프로그램순원가의 의미

- 프로그램이란 정부가 시행하는 최소 정책단위로서 동일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개 이상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됩니다. 통상 프로그램은 각 부처의 국(局)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묶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 프로그램순원가란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총원가에서 프로그램수익을 차감한 후의 순원가를 말합니다. 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 수혜자가 납부(프로그램수익)한 후 원가보상이 되지 않은 부분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며, 이는 일반납세자의 부담분으로 보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또한 프로그램순원가는 자원배분에 관하여 세입세출결산 정보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성과지표와의 연계 등을 통해 개선된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합니다.



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 수혜자가 납부한 후 원가보상이 되지 않은 부분, 즉 일반 납세자의 부담분으로 보상될 부분을 의미하며, 프로그램순원가는 성과지표와 연계하여 사업 평가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4-9 프로그램별 순원가정보의 의미

	20X1년 국립박물관 건설	20X2년 국립박물관 운영	예산지원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 원가지원은 증가하고 있음
세입-세출 결산	세출: 건설비 100억 세입: -	세출: 운영비 2억 세입: 관람료 1억	• 100억 → 2억 세출축소 • 현금유출입 구분제공
프로그램순원가	5억: 감가상각비 5억(20년)	6억: 감가상각비 5억+ 운영비 2억-관람료1억	• 사업 원가정보 및 수혜자 부담분 한번에 확인
성과지표 (성과지표와의 연계)	-	관람객수 100만명 • 순원가 6억/100만명 • 관람료 1억/총원가 7억	• 다른 공공운영시설 사업과 성과비교 • 관람료 적정성 평가

*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X1년도에 100억원을 지출하여 박물관을 건설하고 X2년도에 운영비 2억원을 추가 지출한 경우 세출 총액 측면에서 보면 문화향유 분야에 대한 지원이 100억에서 2억으로 축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순원가 측면에서 보면 X1년도에 비해 X2년도에는 운영비가 추가 발생하여 오히려 지원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관람료 1억의 수입을 걷는 경우 세출과 별도로 세입결산서에서는 별도로 보여주지나 프로그램순 원가에서는 이를 통합하여 보여주므로 정보유용성이 커집니다. 프로그램순원가 정보는 사업운영 이후 관람객수와 같은 성과지표에 연계하여 사업운영의 효율성 등을 평가할 수 있고 유사사업과 비교할 수 있어 더 유용합니다.

3. 재정운영결과의 의미

-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에서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비배분수익을 가감하여 산출하고, 전체 재정활동을 통하여 소요된 원가를 나타내며,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재정운영표의 가장 아래에 표시되는 재정운영결과는 국가가 한 해 동안 나라살림을 운영한 결과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즉, 재정운영결과는 국가가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들어간 비용의 크기와 국민으로부터 국세나 부담금 등의 방식으로 거두어들이는 수익의 크기를 비교해서, 지난 1년간 나라살림 결과를 보여주는 수치인 것입니다.
-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재정운영결과는 기업의 손익계산서 가장 마지막 줄에 나타나는 당기순이익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 당기순이익의 경우 그 금액이 크면 클수록 기업이 한 해 동안 적은 비용을 들여 큰 수익을 올렸으니 기업운동을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국가의 경우 재정운영표상 이익이 발생했다고 하면 충분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재정운영표에서는 마지막 줄에 나타나는 재정운영결과보다는 개별사업의 손익을 나타내는 프로그램별 순원가정보가 중요합니다. 물론 수익보다 비용이 커서 재정운영결과가 계속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운영결과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재정운영결과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 바로 국가재정운영을 잘 못했다는 평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는 재정이 지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정운영표는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하여 표시하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정운영결과가 부(-)의 수치가 되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의 수치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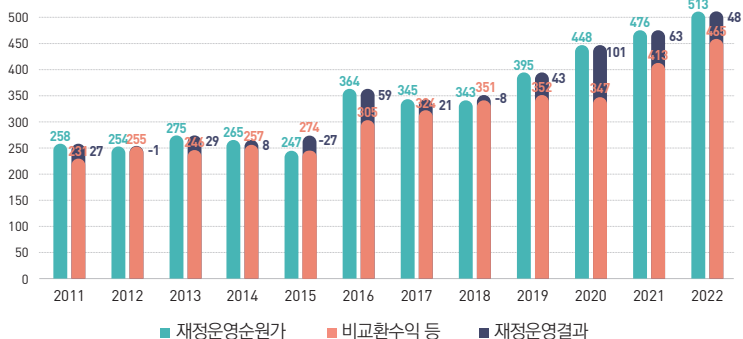
표 4-15 2018~2022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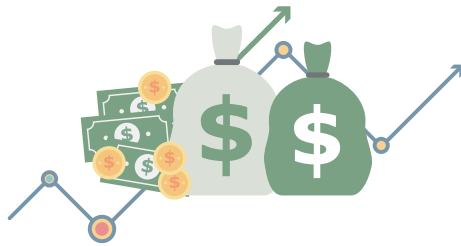
(단위: 조원)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I. 재정운영순원가	343	395	448	476	513
II. 비교환수익 등	(351)	(352)	(347)	(413)	(465)
III. 재정운영결과(I-II)	(8)	43	101	63	48
	수익이 초과 발생	원가가 초과 발생			

- 2018년과 2019년 재정운영결과를 비교해보면, 2018년에는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2019년에는 원가가 초과로 발생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비교환수익 등은 거의 유사하나 재정운영순원가가 52조원 더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 또한 2020년부터 재정운영순원가와 비교환수익 등이 계속해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확장재정을 통해 돈을 더 걷고 더 사용하였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 더불어 중요한 것은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국가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다고 할 수 없고, 원가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국가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단순히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림 4-10 연도별 재정운영순원가, 비교환수익 등 재정운영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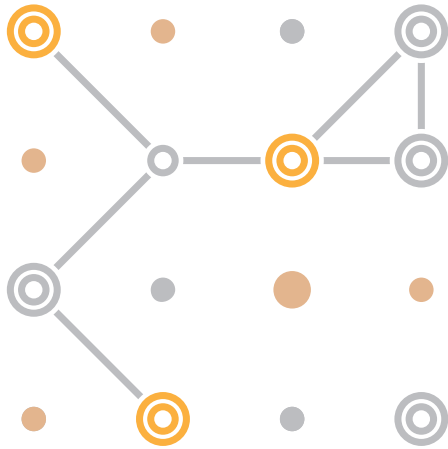
알기 쉬운 국가회계

Government Accounting



Part 05

국가 재무제표 '더' 들여다보기





05 국가 재무제표 '더' 들여다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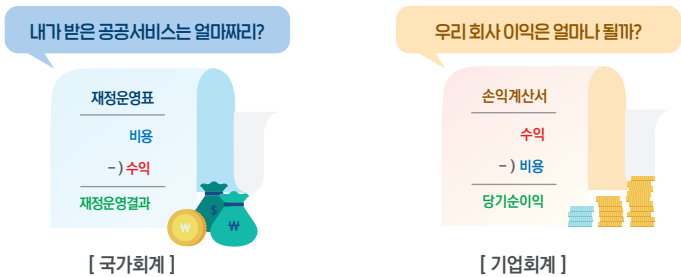
01절 국가 고유의 특성

1. 국가회계와 기업회계의 주요 차이

(1) 재무제표 체계

- 국가회계의 재무제표인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주석은 각각 기업회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주석과 유사합니다. 또한, 기업회계에서 작성하는 현금흐름표의 경우 국가회계에는 이와 유사한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 조정표를 작성하여 필수보충정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국가회계의 재정운영표는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하는 구조이고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는 구조로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 이러한 차이는 국가와 기업의 운영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기업은 경영 활동을 통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주주에게 배당을 배분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므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당기순이익 등의 정보가 중요하나, 국가는 국민들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국가가 국민들로 부터 징수한 세금을 가지고 공공서비스를 얼마의 비용(재정운영순원가)을 들여 수행 하고 있는지의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림 5-1 재정운영표와 손익계산서의 차이



(2) 국가의 특수한 자산

- 국가는 현금, 유가증권, 유·무형자산 뿐만 아니라 경부고속도로, F-16 전투기, 경복궁 등과 같은 자산을 보유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은 각각 사회기반시설, 전비품, 유산자산 등으로 구분되며, 유산자산을 제외하고는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유산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는 않지만 필수보충정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의 기반형성을 위하여 대규모 투자로 건설되고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및 댐 등의 자산으로 국가의 공공서비스 잠재력을 나타냅니다. 이 중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되는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수선 유지비를 '감가상각비로 대체'하는 회계처리 등 특수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전비품은 전쟁의 억제 및 수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제작된 전문적인 군사장비 및 탄약 등을 의미합니다. 전비품은 일반적인 자산과 같이 인식하나, 국가 안보와 관련 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 유산자산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국가가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이며, 신뢰성 있는 가액의 측정이 불가능하므로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필수 보충정보로 제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자산·부채 평가 차이

- 기업회계는 유가증권의 공정가치 평가가 원칙이나, 국가회계는 투자목적의 유가증권의 경우에만 공정가치 평가를 적용하는 등 일부에 대해서 공정가치 평가를 규정하고 있어 차이가 존재합니다.
- 국가회계는 기업회계와 달리 차입원가자본화, 지분법 평가, 이연법인세평가 등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업회계에 없는 정책적 목적의 저리융자금에 대한 보조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융자보조원가'를 산정하는 규정이 존재하며, 특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감가상각을 수행하지 않고 관리·유지비용을 감가상각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감가상각대체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표 5-1 국가회계와 기업회계의 주요 차이 비교

구분	국가회계	기업회계
목적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서비스제공 → 프로그램원가 및 재정운영결과 정보제공	경영활동을 통한 이윤추구 → 당기순이익의 제공
재무제표 체계	•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주식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식
	• 재정운영표: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	•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수익-비용)
	• 현금흐름정보는 필수보충정보로 제공 (충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 현금흐름정보는 재무제표로 제공 (현금흐름표)
거래 유형	교환거래, 비교환거래 모두 발생	교환거래
자산 정의 차이	경제적효익 창출 외 공공서비스 잠재력도 고려	경제적효익 창출 고려
국가회계의 특수자산	사회기반시설, 전비품: 재무제표 인식 유산지산: 재무제표 미인식	해당 없음
유가증권 평가	취득원가(또는 상각후원가) 원칙	공정가치 평가 원칙
차입원가 자본화	인정되지 않음 (전액 비용처리)	자본화 원칙
지분법 평가	해당 없음	지분법 평가
이연법인세	해당 없음	이연법인세 평가
기타 대여금	용자보조원가충당금 평가, 감가상각대체	해당 없음

2. 사회기반시설의 감가상각대체

- 사회기반시설은 일반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을 준용하여 건물, 구축물 등 세부 구성 요소 별로 감가상각을 수행하되, 사회기반시설 중 관리·유지 노력에 따라 취득 당시의 용역 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수행하지 않고, 관리·유지에 투입되는 비용을 감가상각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이는 다른 일반유형자산과는 달리 사회기반시설은 지속적인 수선유지를 통해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수행하지 않고 수선유지비용을 감가상각비로 보는 것입니다.
- 예컨대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일정기간 후 포장을 다시 하여 영구적으로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기반시설의 특징과 감가상각의 목적이 비용 배분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수선유지비용을 감가상각비로 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 현재 국가회계에서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은 도로 포장물과 국가하천시설 중 제방이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내역을 필수보충정보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림 5-2 용역잠재력이 유지되는 경우(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저리용자금

- 저리용자금은 국가가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를 제공하는 융자금을 말합니다. 손해 보는 거래를 할 이유가 없는 기업 등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융자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저리용자금의 경우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하거나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어느 정도 감내하면서 국가가 지불하게 되는 비용을 계산해서 '융자보조비용'과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을 인식하게 됩니다.
- 여기서 유효이자율은 보통 국채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는데, 융자보조원가란 결국 국가가 조달한 국채의 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를 하게 됨으로써 이자율 차이 만큼의 비용이 국가에 발생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 이러한 이자율 차이를 단순히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의 차이로 재정운영표에 표시하는 것보다 차이금액을 '융자보조비용'으로 보여줌으로써 보조금 성격의 재정지출 파악에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 저리용자금의 대손충당금(받지 못할 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경우도 다른 채권과 동일하게 대손충당금으로 표시하는 것보다 회수하지 못할 금액만큼 민간에 보조금을 지급한 성격으로 보아 '융자보조비용'으로 기록합니다.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은 유효이자율보다 낮게 융자하거나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국가가 지불하는 비용을 표시하는 것이며, 저리용자금의 차감 항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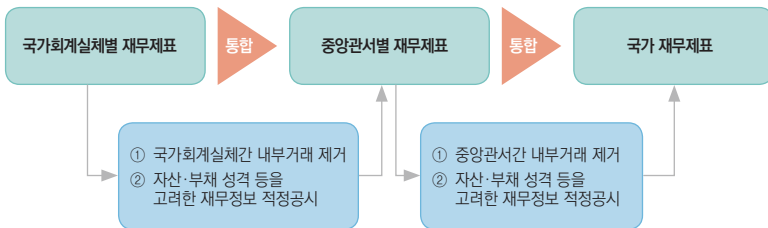
그림 5-3 저리용자금의 이해



4. 국가 재무제표와 내부거래 제거

- 국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목적은 정책결정자, 국회 및 일반국민 등 다양한 정보 이용자들에게 각 회계 및 기금 단위뿐만 아니라 중앙관서별 및 국가전체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우리나라에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국가의 행정활동 등을 위한 60개의 중앙부처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부처의 특성에 맞게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앙관서별로 일반회계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많게는 14개의 회계와 기금들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하여 중앙관서의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중앙관서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체계 구축이 가능해 집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재무제표 작성의 토대를 이루게 됩니다.
- 국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중앙관서의 재무제표를 모두 통합한 후 중앙관서의 통합 때와 마찬가지로 내부거래 제거를 통하여 상호 발생한 거래를 제거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국가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의 결과를 알려주는 국가 재무제표가 작성되게 됩니다.

◎
그림 5-4 재무제표의 통합절차



*자료출처: 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 실무해설1



- 국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재무제표를 통합한 후 내부거래 제거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내부거래제거란 회계실체간의 거래를 제거하는 것으로서 보고 실체의 재무제표상 중복계상을 방지하고 각 보고주체별(중앙관서, 국가)로 보다 정확한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의 결과를 보여주는 회계처리입니다.
- 예를 들어, 일반회계에서 정부출연금 10억원을 기금에 지출한 경우 기금은 수익으로 처리하고 일반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통합과정에서 내부의 회계실체 간 손익거래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수익과 비용이 중복으로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부 거래제거에는 위에서 예를 든 수익·비용 간 내부거래 외에 자원의 조달·이전 내부거래와 자산·부채의 내부거래 등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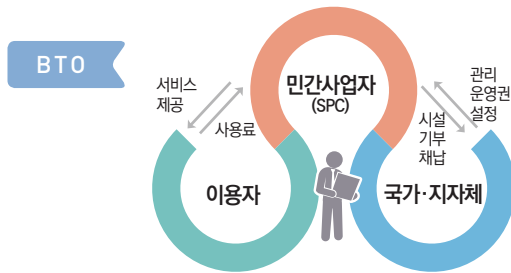
5. 민간투자사업 회계처리

- 국가는 도로, 학교, 병원 등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 등에 대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의 확충·운영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많은 민간투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건설되는 시설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각 방식에 맞는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수익형 민자사업(BTO: Build Transfer Operate)

- 민간자금으로 건설(Build)하고,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Transfer)한 후, 사용료 징수 등 운영(Operate)을 통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도로, 철도 등 수익(통행료 등) 창출이 용이한 시설에 대해서 채택하는 민간투자 방법입니다.

◎
그림 5-5 수익형 민자사업(B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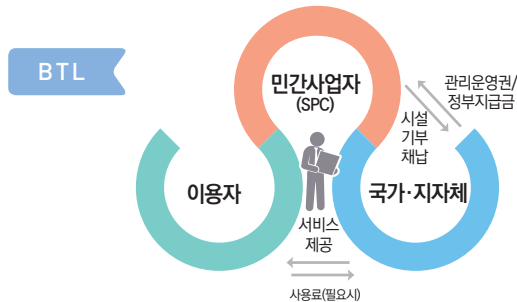
- BTO방식에 의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산 준공 후 민간사업자가 국가에 자산을 넘기는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며, 민간사업자에게 부여된 관리 운영권은 자산의 차감계정인 사용수익권으로 계상합니다. 사용수익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걸쳐서 상각합니다.
- 민간사업자의 투자금 회수는 운영수입으로 이루어지므로 국가는 최소운영수입을 보장을 계약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잠재적 지출 위험이 있으므로 해당 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2)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 Transfer Lease)

- 민간자금으로 건설(Build)하고,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Transfer)한 후, 정부가 시설 임대료(Lease) 및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학교, 문화시설 등 수요자(학생, 관람객 등)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만으로는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림 5-6 임대형 민자사업(BTL)



- BTL방식에 의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부여된 관리운영권을 임차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대료를 실질적인 자산의 취득대가로 보아 할부로 시설물을 취득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합니다.
- 민간투자비를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임대료 지급액의 총액을 부채로 계상하여, 임대료 지급액의 총액과 민간투자비와의 차이를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합니다.

표 5-2 연도별 BTL 미지급금 규모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총액	72,152	75,190	76,386	79,741	96,191	92,207	90,677	89,736	87,325
단기	2,787	3,158	3,076	4,130	5,334	5,455	5,698	6,363	6,778
장기	69,365	72,032	73,310	75,611	90,857	86,752	84,979	83,373	80,547



BTO와 BTL만 회계처리를 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BTO와 BTL이외에도 아래와 같이 BOT, BOO, BLT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합니다. 다만, BTO와 BTL은 투자를 한 사업자의 권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별도 회계처리를 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BOT (Build-Operate-Transfer)	준공 후 일정기간 사업자에게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에 귀속
BOO (Build-Own-Operate)	준공과 동시에 사업자에게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
BLT (Build-Lease-Transfer)	사업자가 시설을 준공한 후 일정기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 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국가에 이전



6. 유산자산

- 유산자산은 오래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취득원가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재무제표에 금액으로 표시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국가가 관리하여야 하고 보존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재무결산서의 필수보충정보로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 상태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필수보충정보의 주 작성 주체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이 있습니다.



승례문과 같은 문화재, 북한산 국립공원 등 국립공원, 우포늪 생태계특별보호구역 등과 같은 보호구역이 유산자산에 해당됩니다.



표 5-3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상태

구 분		단 위	2022회계연도	2021 회계연도
문 화 재	토지	㎡	128,596,757	128,591,620
	건물	㎡	121,138	120,495
	입목	식	369	369
	건축물	식	2,316	2,319
	국보, 보물, 등록문화재 등	점	11,705	11,491
국립공원		km ²	6,728	6,728
보호구역		km ²	383,279	381,216



표 5-4 유산자산취득비 및 유산자산수선유지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1 회계연도
유산자산취득비	89,238	126,550
유산자산수선유지비	8,032	9,616

7. 국세징수활동표

- 국가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의 경우 국세청과 관세청,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의 경우 국세징수활동을 주 업무로 담당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이 세금을 징수한다고 해서 해당 세입을 부처의 수익으로 계상을 하게 되면 국세청과 관세청의 재정운영표에 왜곡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국세와 관련된 국세수익과 국세수입금액(현금수납액)의 회계처리를 별도의 보고서에 모으는 처리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국세징수활동표가 만들어집니다. 국세징수활동표에는 당기의 국세수익과 국세수입금액이 나타나게 되며 국세 관련 채권에 따른 대손상각비 등 국세징수활동과 관련된 모든 금액이 모이게 됩니다.
- 작성 주체인 국세청, 관세청, 기획재정부에서 인식한 국세징수활동표상 금액 중 국세수입(현금수납액)은 국가통합 과정에서 내부거래로 제거되고, 국세수익은 재정운영표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통해 국가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표 5-5 2022회계연도 국세청 국세징수활동표 일부

(단위: 억원)

	2022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I. 국세수익	3,176,391	2,808,362
(1) 국세수익발생금액	3,228,188	2,862,691
1. 소득세수익	1,358,544	1,191,301
2. 법인세수익	1,039,786	740,489
...
15. 종합부동산세수익	68,648	71,588
(2) 대손상각비	(54,376)	(58,378)
(3) 대손충당금환입	2,578	4,050
II. 처분	3,176,391	2,808,362
(1) 국고이전지출	3,037,495	2,702,537
(가) 총현금수입	4,063,417	3,543,312
1. 소득세수입	1,387,674	1,239,041
2. 법인세수입	1,108,194	785,035
...
15. 종합부동산세수입	69,846	62,562
(나) 국세환급금	(1,025,922)	(840,775)
(2) 타회계이전	86,978	96,141
(3) 물납이전	687	4,996
(4) 미수국세의증감	87,408	18,825
(5) 대손충당금의증감	(36,178)	(14,136)
III. 차감 계(I-II)	-	-



8. 국유재산위탁사업 회계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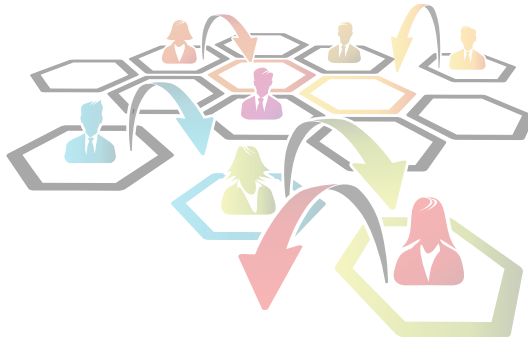
- 국유재산위탁사업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 처분, 개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개발비용을 조달하여 시설물 등을 축조한 후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합니다.
- 그 대가로 국가는 일정기간 동안 수탁자에게 위탁개발자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 수탁자는 위탁기간 동안 국가를 대리하여 위탁개발자산을 처분 또는 임대하게 됩니다. 이때, 처분, 임대 등 개발에 따른 모든 수입은 국가에 귀속되고 수탁자는 국가로부터 개발·관리 등에 따른 보수, 개발비용, 금융비용을 지급받게 됩니다.
- 정상적인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가상승과 이자율상승 등에 따라서 당초 사업 계획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준공 전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며, 이러한 '준공 전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서 준공 전 회계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 '준공 전 위험'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 국가는 준공 전에 발생한 개발비용 등을 '건설중인자산'으로 인식합니다. 반면, '준공 전 위험'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 국가는 준공시점에 이를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 또한,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준공 전 위험' 부담 여부에 상관없이 위탁개발사업의 현황 및 발생비용 등에 대해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표 5-6 2022회계연도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관련 공시 현황
(단위: 백만원)

수탁자	준공 여부	사업명	개발의 종류 (시설물 용도)	개발 원금	위탁기간 (예정)	위탁보수		
						개발 보수	관리 보수	합계
한 국 자 산 관 리 공 사	준 공	나라키움 대전센터	업무시설	74,595	2009.9.1. ~ 2039.8.31. (30년)	1,542	5,369	6,911
		나라키움 세종국책 연구단지	연구청사	191,305	2014.11.20. ~ 2039.11.19. (25년)	2,917	3,539	6,456
		수원법원 종합청사	공공청사	166,703	2019.02.25. ~ 2044.02.24. (25년)	5,110	3,438	8,548
		수원 고지검청사	공공청사	149,148	2019.02.25. ~ 2044.02.24. (25년)	6,608	3,282	9,889
		∴	∴	∴	∴	∴	∴	∴
		합계		908,438		26,960	36,313	63,273

9. 정부조직개편 회계처리

-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조직개편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정부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경우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의 이관 등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자산·부채 및 순자산을 이관·승계하는 국가회계실체는 정부조직개편일을 기준으로 개편일 전일의 자산·부채 및 순자산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이관하고 승계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합니다.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이관하고 승계하는 자산·부채 및 순자산은 재정상태표에 총액으로 표시합니다.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한 자산·부채 및 순자산의 이관은 취득이나 처분과 같은 거래가 아닌 일괄 승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이관하고 승계하는 순자산은 관련 자산·부채에 대응시키고, 순자산변동표상 조정항목으로 반영합니다.





02절 현금주의 결산과의 비교

1. 예산결산의 재산과 재무결산의 자산의 차이

- 국가가 소유한 재산은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물품관리운용보고서에서 보고하고 있으며 국고금, 국가채권, 국유재산, 물품 등이 있습니다.
- 발생주의에서 말하는 자산은 건설중인자산, 미수이자, 선급금 등 발생주의 항목을 추가로 포함한다는 점에서 국가 재산과 차이가 있습니다.
- 또한, 법령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대상이라 해도 민간이 관리하는 기금(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기금)이 보유한 자산은 국가의 재산으로 보지 않지만, 발생주의 하에서는 자산에 포함됩니다.
-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물품관리운용보고서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중인자산 및 민간이 관리하는 기금의 자산 등에 대한 정보가 발생주의 하에 국가 자산으로 보고됨으로써, 국가의 자산관리체계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서비스 공급 능력에 대한 정보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림 5-7 재산과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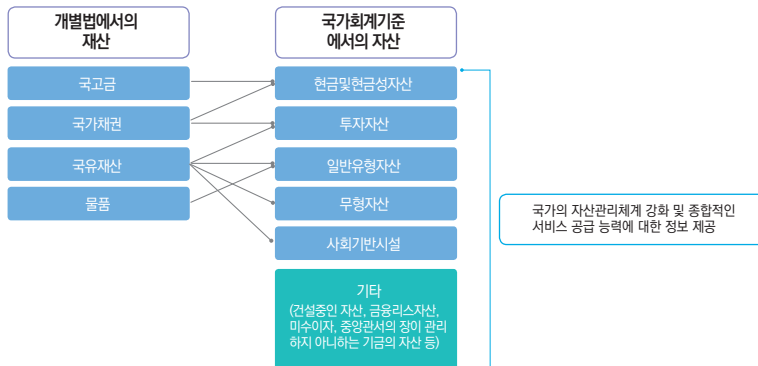


표 5-7 2022회계연도 재산과 자산의 차이

(단위: 조원)

구분	금액	비고
자산	2,833.6	
국유재산	1,369.2	
국가채권	469.6	
물품	15.2	
국민연금 보유 유가증권	867.8	
공공기관관리기금 자산	122.9	정부내에탁금 1.9조원, 국등기토지 1.8조원 제외
전비품및건설중인자산	152.8	전비품 113.6조원, 건설중인자산 39.2조원으로 구성
한국은행예치금	44.5	한국은행국가예금 16.0조원, 외국환평형기금 28.5조원으로 구성
발생주의차감계정	△151.2	사용수익권 △96.3조원, 대손충당금 △54.6조원 등으로 구성
기타발생주의항목 등	64.3	선금금 41.2조원, 미수국세 4.5조원, 군수품 4.5조원 등으로 구성
자기국공채	△121.6	국채 △121.0조원, 공채 △0.6조원으로 구성



2. 예산결산의 채무와 재무결산의 부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발생주의 국가회계 도입 전에는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를 국가채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국가채무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왔습니다.
- 국채는 국가가 공공서비스 자원마련을 위해 발행하는 증권이며, 차입금은 빌린 돈입니다. 또한,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가 향후 국고지출이 예상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하며, 향후 현금지출 예상액을 관리하여야 하므로 채무로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채무는 계약에 따라 지출이 확정된 거래로서 발생주의에서 말하는 부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발생주의 정보에는 미지급비용과 같은 기간경과성 부채나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하지만 지출 가능성이 높은 총당부채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또한, 국고채무부담행위 중 계약행위만 이루어지고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받지 않아 지출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발생주의에서는 부채로 보지 않습니다.

그림 5-8 채무와 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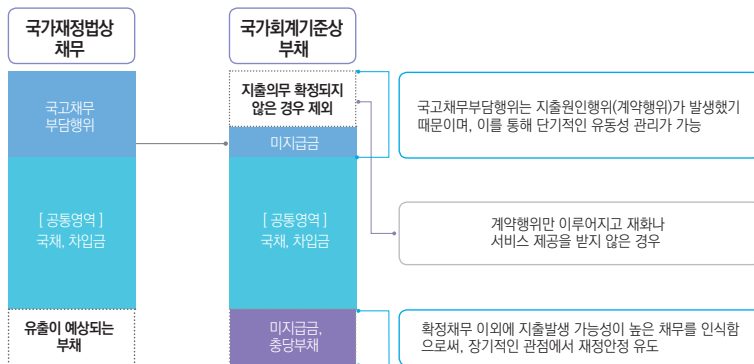


표 5-8 2022회계연도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의 비교

(단위: 조원)

구 분	부채 (A)	국가채무 (B)	차 이 (A-B)	차이내역
국 채	1,018.6	1,031.5	△12.9	할인(할증)발행차금 등
국 내 차 입 금	2.2	1.9	0.3	공공기관 관리기금 차입금 등
해 외 차 입 금	-	-	-	
국고채무부담행위	-	0.1	△0.1	인식시점차이
연 금 총 당 부 채	1,181.3	-	1,181.3	발생주의 부채로 현금주의 국가채무에서 제외
퇴직수당총당부채	52.8	-	52.8	
공 채	21.6	-	21.6	중소기업진흥채권 등
기 타	184.5	-	184.5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95.5조원) 등
소 계	2,461.0	1,033.4	1,427.6	
자 기 국 채	△134.4	-	△134.4	국민연금보유(128.7조원) 등
자 기 공 채	△0.6	-	△0.6	국민연금보유(0.5조원) 등
합 계	2,326.0	1,033.4	1,292.5	



3. 재정운영결과와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국가의 살림살이 운영에 따라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힐 수도 있고, 지출이 당초의 세출 예산보다 적어 돈이 남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그렇다면 재정운영결과와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은 어떻게 다를까요? 재정운영 결과는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하여 그 결과를 표시해 주는 숫자이고,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은 현금주의 기준에 따라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하여 현금이 남았는지 부족한지를 표시해 주는 숫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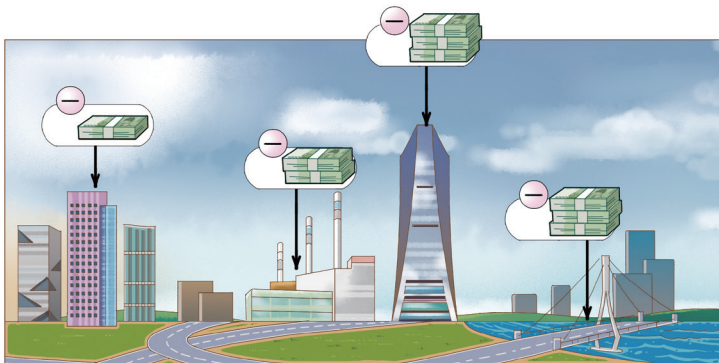
그림 5-9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해 국가살림살이 결과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30조원 발생했다고 합시다. 이는 현금 수입액이 현금 지출액보다 30조원 많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30조원이 발생했다면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 현금이 남았다는 측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현금이 남은 원인 중에 국채발행,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으로 현금이 증가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지요. 기억하실 점은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은 한해 살림살이 결과 현금이 남았다는 의미이지 회계에서의 이익 개념은 아닙니다. 기업의 현금흐름표의 현금증가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 그렇다면 재정운영결과는 어떤 의미일까요? 재정운영결과는 얼마를 건어 들어서 얼마나 써서 없어졌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면 됩니다. 재정운영결과가 손실이라면 건어 들인 것보다 많이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서 사용은 써서 없어진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현금지출을 통해 건물을 건설했다면 현금은 지출되었지만 현금 지출로 건물이라는 자산이 생겼으므로 써서 없어진 것은 아니지요.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현금이 지출되었으므로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재정운영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림 5-10 현금지출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재정운영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4.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 예산회계 결산상의 세입세출의 차액인 총잉여금과 재무제표상 비용과 수익의 차이인 재정운영결과는 서로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인식기준 차이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총잉여금과 재정운영결과의 차이를 설명하는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를 필수보충정보로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 차이항목으로는 크게 '자산·부채의 증감', '발생주의 기간수익·비용 차이'와 '순자산 변동'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예산회계 결산의 결과치인 총잉여금과 재무회계결산의 결과치인 재정운영결과 간 차이 금액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표 5-9 2022회계연도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요약

(단위: 억원)

	2022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I. 총잉여금		141,992		273,048
(1) 일반회계	88,181		206,426	
(2) 특별회계	53,811		66,622	
(3) 기금	-		-	
II. 차이 항목		(619,675)		(907,210)
(1) 자산·부채의 증감	371,106		627,402	
(2) 발생주의 기간수익·비용 차이	(799,188)		(1,400,232)	
(3) 전기 결산상잉여금 세입이입액	(117,710)		(74,013)	
(4) 순자산변동	(73,883)		(60,367)	
III. 재정운영결과(I + II)		(477,682)		(634,162)

03절 국가재무제표의 재구성

1. 재정상태표

- 재정상태표의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되며,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구분됩니다.
- 민간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유동성배열법에 따른 구분을 따르고 있지만 정보이용자 입장에서는 재정상태표 상 자산의 성격별 금액이 궁금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재정상태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투자증권의 경우 국민연금과 같이 국가가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으나 그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구분한 정보에 대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부채의 경우에도 국공채와 같이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와 연금충당부채와 같은 미래 지출에 대한 의무 부분을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예산결산 상 국가채무와 비교를 하는데 있어서도 조금 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를 반영하여 재정상태표를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 차입부채와 충당부채로 구분하여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표 5-10 국가 재정상태표 재구성

(단위: 조원)

구분	'21 회계연도(A)	'20 회계연도(B)	증감액 (A-B)
자 산	2,866	2,487	379
금융자산	1,702	1,487	215
금융상품 등	111	96	15
투자증권	170	147	23
정부출자금/대여금	340	316	24
사회보장성기금자산	854	745	109
기타금융자산	227	183	44
비금융자산	1,165	999	166
일반유형자산	704	604	100
사회기반시설	410	348	62
기타비금융자산	51	47	4
부 채	2,195	1,982	213
차입부채	931	818	113
국공채	816	715	101
기타이자발생부채	115	103	12
총당부채	1,199	1,102	97
연금총당부채	1,138	1,045	93
연금총당부채 외	61	57	4
기타부채	65	62	3
순 자산	671	505	166

2. 분야별 재정운영표

- 각 회계실체와 중앙관서의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별로 원가를 보여주고 있지만, 국가의 재정운영표는 각 부처별로 재정운영순원가를 공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프로그램은 총 608개로 국가 재정운영표에서 모두 보여줄 수 없으므로 부처별 순원가를 공시함으로써 대략적인 사업별 원가를 공시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부처의 수도 60개로 적지 않아 정보이용자 입장에서 한 눈에 원가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상위 단계인 분야별로 원가를 제공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분야는 총 16개이나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면 국가의 분야별 원가를 총 15개의 분야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 원가를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 및 비교환수익을 제외한 프로그램총원가와 프로그램수익에 관한 정보입니다.

표 5-11 2021회계연도 분야별 원가

구분	프로그램총원가(A)	프로그램수익(B)	프로그램순원가(A-B)
계	609.3	128.0	481.3
1. 사회복지	225.3	78.3	147.0
2. 일반·지방행정	100.1	31.0	69.1
3. 교육	81.6	0.2	81.4
4. 국방	45.5	0.4	45.1
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36.7	3.9	32.8
6. 보건	24.6	0.1	24.5
7. 교통및물류	23.9	1.8	22.1
8. 농림수산	20.4	2.8	17.6
9. 환경	9.9	0.9	9.0
10. 과학기술	8.9	0.0	8.9
11. 통신	8.6	7.4	1.2
12. 문화및관광	8.0	0.5	7.5
13. 공공질서및안전	6.7	0.1	6.6
14. 국토및지역개발	5.6	0.1	5.5
15. 통일·외교	3.5	0.5	3.0

(단위: 조원)



3. 성질별 재정운영표

- 각 중앙관서와 국가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수익 및 비교환수익 등으로 구분하여 공시합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별 원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건비, 운영비 등 성질별 원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필수보충정보로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공시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구분을 상위항목으로 하고 성질별로 공시하고 있어 역시 한 눈에 각 항목별 원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 본 절에서는 각 성질별 원가를 확인하기 위해 프로그램별 구분을 없애고 항목을 간소화 하여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 재구성 결과 5년 주기 재평가에 따라 평가손실이 58.8조원 증가, 보조비 29.6조원 증가 등으로 비용이 증가하였고, 국세수익 59.2조원 증가, 자산처분이익 27.6조원 증가 등으로 수익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5-12 성질별 재정운영표 재구성

(단위: 조원)

구분	'21회계연도(A)	'20회계연도(B)	증감액 (A-B)
비용(Ⅰ)	701.8	609.3	92.5
보조비	266.5	236.9	29.6
기타이전비용	152.1	149.5	2.6
출연비	47.1	42.3	4.8
보전비	11.3	9.7	1.6
인건비	49.3	47.5	1.8
운영비	30.9	24.3	6.6
감가상각비/수선유지비	24.0	21.9	2.1
이자비용	23.7	22.6	1.1
대손상각비	4.2	5.0	△0.8
평가손실	71.4	12.6	58.8
자산감액/처분손실	3.4	14.8	△11.4
재화및용역제공원가	6.3	5.0	1.3
기타비용	11.6	17.2	△5.6
수익(Ⅱ)	638.4	508.8	129.6
국세수익	347.9	288.7	59.2
부담금·제재금수익	24.4	22.3	2.1
사회보험수익	21.4	20.3	1.1
기타비교환수익	18.9	16.2	2.7
연금수익	73.3	70.9	2.4
이자수익	16.0	15.6	0.4
자산처분이익	49.8	22.2	27.6
평가이익	9.0	4.2	4.8
재화및용역제공수익	15.8	14.2	1.6
기타수익	61.9	34.2	27.7
재정운영결과(Ⅰ-Ⅱ)	63.4	100.5	△37.1

알기 쉬운 국가회계

Government Accounting



별첨

1. 2022회계연도 국가 재무제표

2. 국가회계실체 현황(2022년 9월말 현재)





별첨 1. 2022회계연도 국가 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

당기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전기말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정부

(단위: 원)

관련 페이지	주석	2022	2021
자산			
p.72	I. 유동자산	513,836,778,690,665	565,881,119,982,154
	1. 현금및현금성자산	41,308,701,056,730	59,048,755,830,014
	2. 단기금융상품	41,787,362,558,845	64,618,109,276,585
	3. 단기투자증권	323,448,544,592,479	327,489,118,161,541
	4. 미수채권	74,454,692,353,452	76,210,830,880,811
	장기채권현재가치할인차금	(13,434,521,328)	(12,908,711,220)
	미수채권대손충당금	(40,099,147,630,441)	(36,252,786,487,567)
	5. 단기대여금	8.4) 34,996,940,189,872	33,633,064,094,314
	단기대여금대손충당금	8.4) (709,212,068,748)	(727,156,621,803)
	6. 기타유동자산	38,662,332,159,804	32,905,907,472,511
p.68	II. 투자자산	1,148,778,020,461,241	1,167,869,356,540,087
	1. 장기금융상품	4,539,365,697,301	2,515,050,477,728
	2. 장기투자증권	794,376,671,807,468	809,794,768,134,056
	3. 장기대여금	8.4) 220,737,974,822,439	203,962,804,507,866
	장기대여금현재가치할인차금	(1,989,648,756)	(1,917,350,895)
	4. 장기대여금대손충당금	8.4) (27,674,757,568,539)	(25,706,526,813,375)
	4. 기타투자자산	156,800,755,351,328	177,305,177,584,707
p.75	III. 일반유형자산	710,398,789,890,924	704,035,611,392,210
	1. 토지	8.3) 466,375,684,372,171	467,933,577,518,587
	토지사용수익권	(775,161,989,099)	(286,243,967,937)
	2. 건물	8.3) 75,492,233,393,516	70,313,302,807,136
	건물감가상각누계액	(5,599,207,786,172)	(2,690,241,129,733)
	건물사용수익권	(1,569,007,304,934)	(1,249,785,407,683)
	3. 구축물	8.3) 18,012,550,850,200	17,893,242,118,025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7,099,043,963,222)	(5,493,576,705,141)
	구축물사용수익권	(60,803,184,709)	(74,338,697,866)
	4. 기계장치	8.3) 11,571,552,157,724	11,292,825,034,534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4,995,301,529,946)	(4,589,750,994,585)
	기계장치사용수익권	(19,106,702,834)	(20,112,318,772)
	5. 집기·비품·차량운반구	8.3) 20,232,002,619,061	19,959,881,938,220
	집기·비품·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10,453,137,989,379)	(9,556,686,614,664)
	집기·비품·차량운반구사용수익권	-	-
	6. 전비품	8.3) 171,701,330,545,527	161,542,610,064,103
	전비품감가상각누계액	(58,091,952,336,799)	(55,090,968,753,737)
	7. 기타일반유형자산	8.3) 10,827,203,917,336	10,348,564,453,217
	기타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누계액	(1,826,944,550,778)	(1,701,619,847,455)
	8.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26,675,899,373,261	25,504,931,895,961
p.79	IV. 사회기반시설	422,859,742,079,061	410,185,270,699,289
	1. 도로	8.3) 328,908,125,909,391	272,329,082,979,335
	도로감가상각누계액	(2,637,728,159,024)	(136,530,244,775)
	도로사용수익권	(68,362,158,385,283)	(67,108,784,679,890)
	2. 철도	8.3) 61,055,358,929,895	68,724,018,473,936
	철도감가상각누계액	(2,625,283,300,161)	(1,877,468,454)
	철도사용수익권	(14,464,918,085,386)	(14,230,176,370,755)
	3. 항만	8.3) 24,927,331,471,555	24,179,539,212,539
	항만감가상각누계액	(589,555,822,585)	(20,522,996,145)
	항만사용수익권	(2,737,371,580,868)	(2,994,484,463,513)
	4. 댐	8.3) 7,716,996,417,119	8,456,395,739,063
	댐감가상각누계액	(104,138,633,249)	-

관련 페이지		주식	2022		2021	
			(3,082,551,582,534)	4,530,306,201,336	(3,030,912,163,826)	5,425,483,575,237
	5.	공항	5,709,028,066,727		6,558,327,511,603	
		공항감가상각누계액	(90,979,061,991)		(6,088,278,125)	
		공항사용수익권	(1,173,806,316,401)	4,444,242,688,335	(1,204,861,977,242)	5,347,377,256,236
	6.	하천	73,453,683,588,409		99,120,424,924,393	
		하천감가상각누계액	(388,199,584,264)		(1,071,856,495)	
		하천사용수익권	(7,389,504)	73,065,476,614,641	(32,522,527)	99,119,320,545,371
	7.	상수도	7,203,170,063,239		11,044,296,984,125	
		상수도감가상각누계액	(459,440,034,660)		(21,935,344,762)	
		상수도사용수익권	(4,002,162,074,254)	2,741,567,954,325	(3,261,844,983,783)	7,760,516,655,580
	8.	국가어항	2,218,825,462,532		2,105,404,135,266	
		국가어항감가상각누계액	(142,121,668,573)		(2,732,141,018)	
		국가어항사용수익권	(11,995,557,076)	2,064,708,236,883	(12,869,223,204)	2,089,802,771,044
	9.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12,539,639,406,007		9,702,505,453,543
p.83	V.	무형자산	2,503,188,947,186		2,590,605,631,964	
	1.	산업재산권		58,385,526,634		49,430,385,763
	2.	광업권		-		415,737,000
	3.	소프트웨어		2,270,463,168,005		2,371,380,401,873
	4.	기타무형자산		174,340,252,547		169,379,107,328
	VI.	기타비유동자산	35,199,839,254,161		15,495,591,094,980	
	1.	장기미수채권	15,846,894,926,954		8,446,669,267,755	
		장기미수채권현재가치할인차금	(291,616,100,239)		(382,715,669,840)	
		장기미수채권대손충당금	(357,984,219,773)	15,197,294,606,942	(267,509,977,000)	7,796,443,620,915
	2.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		20,002,544,647,219		7,699,147,474,065
		자산계	2,833,576,359,323,238		2,866,057,555,340,684	
		부채				
	I.	유동부채	220,032,412,616,168		187,397,896,031,641	
	1.	단기차입금		95,545,853,752,937		96,268,978,936,028
	2.	유동성장기차입부채	2	96,394,272,809,396		63,280,637,583,397
	3.	기타유동부채	28,342,930,321,157		28,080,561,319,104	
		기타유동부채현재가치할인차금	(250,644,267,322)	28,092,286,053,835	(232,281,806,888)	27,848,279,512,216
p.85	II.	장기차입부채	812,245,843,662,385		756,089,771,719,861	
	1.	국채	2	929,808,110,808,540		866,974,718,699,430
		국채할인발행차금	(21,913,482,080,547)		(8,316,331,114,264)	
		국채할증발행차금	9,034,192,455,818		10,640,994,005,432	
		자기국채	(124,812,280,351,118)	792,116,540,832,693	(125,792,793,529,322)	737,562,166,829,756
	2.	공채	2	17,833,048,095,756		16,597,473,722,734
		공채할인발행차금	(5,658,258,364)		(6,200,057,639)	
		자기공채	(580,826,638,442)	17,246,563,198,950	(1,032,606,435,709)	15,558,667,229,386
	3.	장기차입금	2	2,882,739,630,742		2,968,937,660,719
p.87	III.	장기충당부채	1,243,236,809,477,381		1,199,407,447,136,480	
	1.	퇴직급여충당부채	3	684,981,775,968		648,244,928,902
	2.	연금충당부채	3	1,181,325,233,815,972		1,138,155,463,599,372
	3.	보통충당부채	3	591,481,579,328		809,174,294,274
	4.	기타장기충당부채	3	60,635,112,306,113		59,794,564,313,932
	IV.	기타비유동부채	50,449,555,506,901		52,424,838,077,272	
	1.	장기미지급금	14,934,031,142,151		13,711,837,699,881	
		장기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	(1,619,024,819,758)	13,315,006,322,393	(1,684,653,945,475)	12,027,183,754,406
	2.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37,272,411,394,291		40,471,785,342,474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현재가치할인차금	(137,862,209,783)	37,134,549,184,508	(74,131,019,608)	40,397,654,322,866
		부채계	2,325,964,621,262,835		2,195,319,952,965,254	
		순자산				
	I.	기본순자산	442,736,634,506,192		442,360,032,867,850	
		적립금 및 잉여금	(276,581,362,841,073)		(250,763,199,132,408)	
	III.	순자산조정	341,456,466,395,284		479,140,768,639,988	
		순자산계	507,611,738,060,403		670,737,602,375,430	
		부채외순자산계	2,833,576,359,323,238		2,866,057,555,340,684	



2. 재정운영표

당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정부

(단위: 원)

관련 페이지	주석	2022	2021
p.97		512,518,247,038,087	476,088,377,301,021
	1. 재정운영순원가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94,800,602,063	118,176,570,199
	2. 국회	707,388,586,950	673,840,235,646
	3. 대법원	1,778,528,488,405	1,738,710,455,962
	4. 헌법재판소	53,712,213,638	72,618,451,916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877,827,911,384	422,147,078,376
	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3,172,817,300	33,086,928,469
	7. 감사원	144,843,968,338	127,449,365,348
	8. 국가정보원	736,154,979,420	683,703,390,620
	9.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645,269,178,400	632,190,643,865
	10. 기획재정부(국고금회계 포함)		
	(1) 기획재정부	9,020,109,203,395	(7,405,210,790,918)
	(2) 국고금회계	(218,929,136,480)	(95,773,402,150)
	11. 교육부	99,476,992,037,991	79,173,545,994,651
	12. 외교부	2,703,747,000,565	2,859,923,627,243
	13. 통일부	223,127,295,665	182,930,178,643
	14. 법무부	4,423,331,074,557	4,485,730,406,761
	15. 국방부	46,853,491,149,469	49,413,822,744,048
	16. 인사혁신처	36,547,372,499,450	34,438,255,287,271
	17. 문화체육관광부	5,716,874,984,957	6,297,964,918,218
	18. 농림축산식품부	11,415,264,722,691	7,788,778,940,815
	19. 산업통상자원부	8,840,433,683,430	9,046,681,711,168
	20. 보건복지부	41,723,682,523,502	24,660,103,187,950
	21. 환경부	13,332,053,607,165	8,421,681,506,883
	22. 고용노동부	30,477,400,170,281	36,966,194,994,117
	23. 여성가족부	1,333,723,461,029	1,250,732,238,549
	24. 국토교통부	(5,056,476,201,250)	54,820,950,296,219
	25. 해양수산부	4,706,845,777,484	5,458,921,879,102
	26. 법제처	41,974,561,320	40,578,729,005
	27. 국가보훈처	5,703,536,490,593	5,683,474,734,611
	28. 식품의약품안전처	618,493,991,934	590,472,782,034
	29. 국가인권위원회	42,383,247,690	39,549,466,577
	30. 방송통신위원회	54,279,252,637	53,259,181,165
	31. 공정거래위원회	138,615,517,155	221,933,193,437
	32. 금융위원회	1,183,429,138,217	940,944,020,530
	33. 국민권익위원회	98,968,006,768	97,676,199,661
	34. 원자력안전위원회	154,345,477,930	155,966,791,489
	35. 국세청	2,374,103,511,445	2,651,809,524,837

관련 페이지	주석	2022	2021
36. 관세청		528,214,919,013	763,649,114,387
37. 조달청		(152,530,761,932)	(180,067,368,531)
38. 통계청		376,159,380,948	424,258,567,737
39. 병무청		258,385,608,220	296,605,379,590
40. 방위사업청		5,008,716,858,727	4,912,075,829,791
41. 경찰청		13,462,477,355,085	13,737,194,710,612
42. 문화재청		1,082,823,332,094	1,156,437,910,428
43. 농촌진흥청		1,107,590,249,476	1,611,485,759,248
44. 산림청		1,777,422,660,733	2,917,125,504,669
45. 특허청		(35,699,757,574)	(66,796,374,501)
46. 기상청		405,202,503,253	483,740,150,338
4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50,050,014,431	489,344,862,757
48. 새만금개발청		718,954,382	60,565,997,987
49. 행정안전부		86,798,880,392,861	74,032,622,312,653
50. 중소벤처기업부		50,454,871,943,042	23,051,457,358,727
51. 소방청		258,547,908,697	296,096,407,246
52. 해양경찰청		1,840,162,284,007	1,716,445,382,779
5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857,781,458,732	9,950,408,592,641
54. 대통령경호처		102,246,677,887	113,315,697,471
55. 기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11,978,892,544	12,938,716,692
56.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12,349,460,325	9,185,428,211
5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7,335,615,589	37,872,085,262
58.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3,730,946,877	9,077,902,038
59. 질병관리청		10,134,634,264,374	7,503,269,869,841
6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4,406,038,959	7,246,040,631
61. 국가교육위원회		918,041,849	-
62. 내부거래 금액			
(1) 내부거래 원가	(9,057,993,341,501)		(8,176,272,072,496)
(2) 내부거래 수익	9,057,993,341,501	-	8,176,272,072,496
p.97 II. 비회계수익 등		464,750,009,088,191	412,672,191,884,148
1. 국세수익			
(1) 국세수익	404,011,788,157,728		353,727,854,517,599
(2) 대손상각비	(5,719,945,253,292)		(6,258,981,513,171)
(3) 대손충당금환입	267,304,263,930	398,559,147,168,366	405,403,328,207
2. 부담금수익		19,276,120,280,376	18,916,142,215,933
3. 제재금수익		5,096,787,523,834	5,542,878,422,406
4. 사회보험수익	8.5)	24,440,660,510,310	21,434,253,663,540
5. 채무면제이익		49,208,575,744	50,381,401,820
6. 기타비회계수익		243,486,916,392	584,976,019,644
7. 기타재원조달및이전		17,084,598,113,169	18,269,283,828,170
p.97 III. 재정운영결과(-II)		47,768,237,949,896	63,416,185,416,873



3. 순자산변동표

당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정부

(단위: 원)

관련 페이지	주 석	기본순자산	적립금및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p.61					
I. 전기 기초순자산		442,197,565,117,937	(158,290,476,164,548)	221,534,466,756,013	505,441,555,709,402
1. 보고금액		442,197,565,117,937	(158,290,476,164,548)	221,534,466,756,013	505,441,555,709,402
2. 전기오류수정손익	6	-	-	-	-
II. 재정운영결과			63,416,185,416,873		63,416,185,416,873
III. 조정항목		162,467,749,913	(29,056,537,550,987)	257,606,301,883,975	228,712,232,082,901
1. 납입자본의 증감		-	-	-	-
2. 투자증권평가손익		-	-	59,258,416,641,501	59,258,416,641,501
3. 파생상품평가손익	5	-	-	(130,730,581)	(130,730,581)
4. 자산재평가이익		-	-	183,571,424,468,316	183,571,424,468,316
5. 기타순자산의 증감		162,467,749,913	(29,056,537,550,987)	14,776,591,504,739	(14,117,478,296,335)
IV. 전기 기말순자산(I-II+III)		442,360,032,867,850	(250,763,199,132,408)	479,140,768,639,988	670,737,602,375,430
V. 당기 기초순자산		442,360,032,867,850	(250,763,199,132,408)	479,140,768,639,988	670,737,602,375,430
1. 보고금액		442,360,032,867,850	(250,763,199,132,408)	479,140,768,639,988	670,737,602,375,430
2. 전기오류수정손익	6	-	-	-	-
VI. 재정운영결과			47,768,237,949,896		47,768,237,949,896
VII. 조정항목		376,601,638,342	21,950,074,241,231	(137,684,302,244,704)	(115,357,626,365,131)
1. 납입자본의 증감		-	-	-	-
2. 투자증권평가손익	7	-	-	(101,750,462,148,487)	(101,750,462,148,487)
3. 파생상품평가손익	5,7	-	-	(554,417,436)	(554,417,436)
4. 자산재평가이익	7	-	183,271,087,444	(20,726,407,786,471)	(20,543,136,699,027)
5. 기타순자산의 증감	7	376,601,638,342	21,766,803,153,787	(15,206,877,892,310)	6,936,526,899,819
VIII. 당기 기말순자산(V-VI+VII)		442,736,634,506,192	(276,581,362,841,073)	341,456,466,395,284	507,611,738,060,403

별첨 2. 국가회계실체 현황(2022년 9월말 현재)

	중앙관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포함)	기금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	-	-	-
2	대통령경호처	○	-	-	-
3	국회	○	-	-	-
4	대법원	○	등기특별회계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5	헌법재판소	○	-	-	-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	-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	-	-
8	감사원	○	-	-	-
9	국가정보원	○	-	-	-
10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
11	기획재정부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복권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기후대응기금
12	교육부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	사립학교고직원연금기금 사학진흥기금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우체국보편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국립중앙과학관(책) 국립과천과학관(책)	과학기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원자력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14	외교부	○	-	-	국제교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15	통일부	○	-	-	남북협력기금
16	법무부	○	교도작업특별회계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7	국방부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	군인복지기금 군인연금기금
18	행정안전부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
19	문화체육관광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언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20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어업재해보험기금 농지관리기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양곡준권정리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축산발전기금
21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	무역보험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중앙관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포함)	기금
22 보건복지부	○	농어촌구조개선훈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립재활원(책) 국립정신건강센터(책) 국립공주병원(책) 국립나주병원(책) 국립부곡병원(책) 국립춘천병원(책)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연금기금 응급의료기금
23 환경부	○	농어촌구조개선훈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섬면피해구제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24 고용노동부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예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25 여성가족부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26 국토교통부	○	교통시설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주택도시기금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27 해양수산부	○	농어촌구조개선훈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수산물전기금
28 중소벤처기업부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29 국가보훈처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보훈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30 인사혁신처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공무원연금기금
31 법제처	○	-	-	-
32 식품의약품안전처	○	농어촌구조개선훈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
33 국가인권위원회	○	-	-	-
34 방송통신위원회	○	-	-	-
35 공정거래위원회	○	-	-	-
36 금융위원회	○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	공적자금상환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도야면저축장려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37 국민권익위원회	○	-	-	-
38 원자력안전위원회	○	-	-	-
39 국세청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
40 관세청	○	-	-	-

중앙관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포함)	기금
41 조달청	-	-	조달특별회계	-
42 통계청	○	-	-	-
43 병무청	○	-	-	-
44 방위사업청	○	-	-	-
45 경찰청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경찰병원(책)	-
46 소방청	○	-	-	-
47 문화재청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문화재보호기금
48 농촌진흥청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
49 산림청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립자연휴양관리소(책)	-
50 특허청	○	-	특허청(책)	-
51 기상청	○	-	-	-
5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	-
53 새만금개발청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
54 해양경찰청	○	-	-	-
55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	-	-	-
56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	-	-	-
5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	-
5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
59 질병관리청	○	-	국립목포병원(책) 국립마산병원(책)	-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	-	-
61 국가교육위원회	○	-	-	-
61개	60개	15개*	4개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13개)	68개

(*) 교통시설특별회계(2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21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7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10개),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6개),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4개)는 여러 중앙관서에 걸쳐 존재

*자료출처: 2022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

알기 쉬운 국가회계

총괄	박성진 소장
참여	진태호 팀장 임정혁 특수전문직3급 오예정 특수전문직3급 장윤지 특수전문직4급 안지현 특수전문직4급
발행일	2023년 8월
발행인	김재진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화	(044)414-2114(대)
웹사이트	www.kipf.re.kr
디자인 기획 인쇄	경성문화사 (044)868-3537
ISSN	3022-0378